ISSN 1739-5542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BUDGET & POLICY

예산춘추

2016 SPRING Vol. 42

NABO 특집 +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NABO 논단 +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 조선 최고의 관료경제이론가, 김육

직장인 심리상담소 + 타인과 상황 판단 시 인지적 오류들

BUDGET & POLICY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예산춘추

2016. Spring vol. 42

발행일	2016년 5월 27일 (통권 제42호)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인	박장호 기획관리관

예산춘추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장호 기획관리관
위원	윤동준 기획협력담당관
	양창석 기획협력1담당
	이상오 기획협력2담당
	윤나나 예산분석관
	강상규 예산분석관
	조가영 예산분석관
	최근성 예산분석관
	오현희 경제분석관보
	최원규 경제분석관
	권 일 경제분석관
	오덕근 사업평가관보
	탁현우 사업평가관
	유규영 사업평가관
간사	정상식 홍보·편집 주무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전화	02-788-4619
팩스	02-788-4686
홈페이지	www.nabo.go.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지난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3당체제'로 재편됐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경제 개혁을 열망하며 국회의 '엄중한 자기 반성'과 '혹독한 체질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대 국회와 300명의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경제활성화 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조화가 잘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민심과 정치 간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도 기대해봅니다. 꽃이 만개한 봄이 오고 곧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국민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산춘추는

정부가 봄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가을에 예산을 심의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예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는 언론의 자세인 "춘추필법"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CONTENTS

BUDGET & POLICY

첫번째 섹션 • **01** NABO INSIDE

NABO 특집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06 경제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 김원식
12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 | 김태일
21 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정말 위험한가? | 김동원
30 정부의 기업지원 방향 | 최현경
35 고령사회 진입과 재정 건전화 | 박종규

NABO 논단
40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 안주엽
45 저출산·고령화시대 정책과제 | 김태헌
51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 | 장석인

최신 분석보고서
58 대한민국 재정 2016
59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60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61 기초연금제도 평가
62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사업 평가

두번째 섹션 • **02** NABO LIFE

66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조선 최고의 관료경제이론가, 김육

72 **트렌드 따라잡기**
불안이 가중된 과잉근심사회와 '램프증후군'

76 **직장인 심리상담소**
타인과 상황 판단 시 인지적 오류들

80 **그곳에 가고 싶다**
남원 광한루

84 **건강한 인생, 맛있는 식탁**
가장 달콤한 독, '설탕' 섭취량부터 확 줄여라!

90 **NABO 재테크**
신용등급 올리는 '신용관리 방안'

92 **취미생활 입문**
자전거 하이킹

96 **NABO인의 서재**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NABO

경제를 읽는 똑똑한 이야기

INSIDE

06

NABO 특집 |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경제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 김원식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 | 김태일

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정말 위험한가? | 김동원

정부의 기업지원 방향 | 최현경

고령사회 진입과 재정 건전화 | 박종규

40

NABO 논단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 안주엽

저출산·고령화시대 정책과제 | 김태헌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 | 장석인

58

최신분석보고서

대한민국 재정 2016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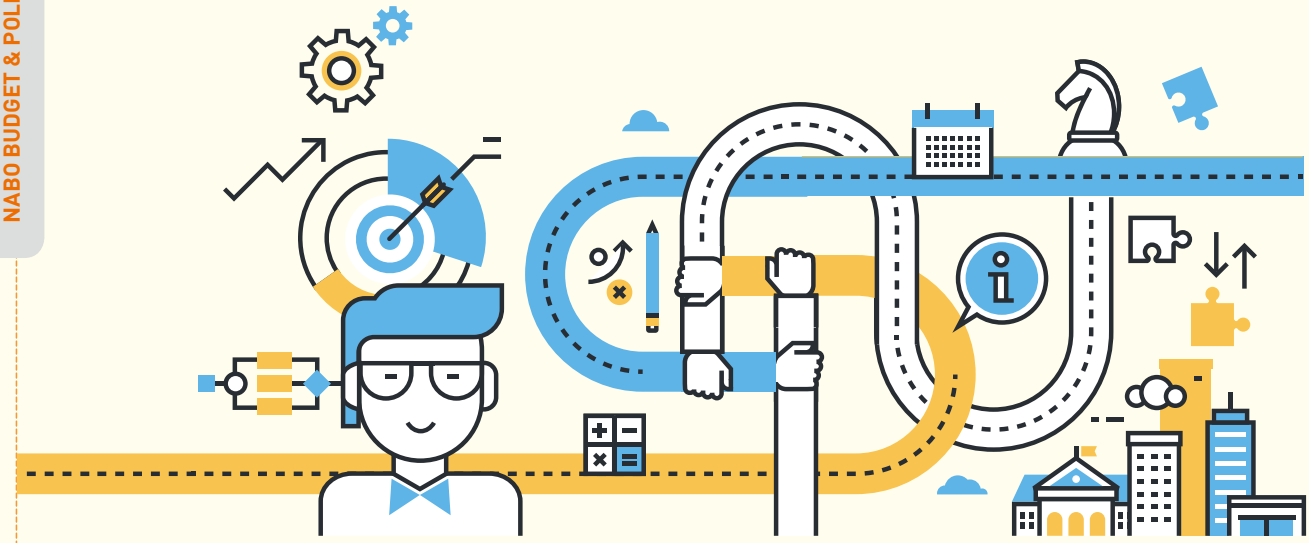
기초연금제도 평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사업 평가

SPECIAL 01

경제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시급한 법안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국회상임위원회의 3/5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매우 시급한 현안이면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부문 등의 개혁 과제들이 법적인 제약으로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치되는 한 국회는 더 많은 소통을 통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해결되지 못한 법안을 적극 조정해서 입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설령 이 개혁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현실 경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안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이들 간의 거시적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 기간 동안 우리 경제나 사회는 세월호나 메르스와 같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안전과 관련된 사건들,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와 남미 자원국가들의 경제위기 등 심각한 외생적 요인에 따른 경기불황, 그리고 소득양극화와 노조나 정규직들의 기득권 지키기 등의 사회적 갈등 등의 이슈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이에 관련된 이슈들을 거의 정리하지 못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자신들의 이해에만 관련된 포퓰리즘 입법에만 집중했다.

더 심각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이는 각 당의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채워진 19대 총선공약이나 18대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그동안의 정책방향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 회기(2016~2020) 기간에는 어느 다른 회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사회문제가 물밀 듯이 제기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정치적 환경과 경제구조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황폐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개혁 부문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개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을 구체화시켜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어서 각 계층에서의 저항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화되고 있는 고령화, 정보화나 공장자동화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근로계층의 빈곤화, 왕따, 증오, 학대, 자살 등에 당면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미래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청년들의 실업 증가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최근에 심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인내, 지혜,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한다.

1 경제·공공·금융 등 부문개혁을 적극 도모해야

우선 경제활성화는 정부의 몫이기는 하지만 국회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외경기의 하강으로 인한 내수부진이나 경제구조 개혁의 지지부진에 따라 국내의 다수 경제연구소나 OECD 등의 해외 경제기구들은 이미 우리 경제가 2%대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거부는 사실상 경기불황을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의 경기불황은 정부와 함께 국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제 환경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의 경기부양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축이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지고, 생산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

SPECIAL 01

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들의 생산구조와 경영마인드가 제조업 중심이어서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재정에서도 복지부분의 소비성 지출비중이 높고 성장형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와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낳을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고, 재정도 건전화를 전제로 지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대 국회에서 기대했던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경제활성화나 더 나아가 근로계층 간 소득 격차와 기회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 법안들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 보호를 통해서 정규직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고령자들에 대한 파견업종 취업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를 생산에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임금체계를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 등 사실상 최소한의 개혁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던 정규직, 고령자, 임금격차 문제 등이 사실상 벽에 부딪힘에 따른 불가피한 입법에 불과하다.

공공부문개혁은 정부재정안정화 정도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짐에 따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게다가 국채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방만한 사업들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나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지 모를 공기업 부채도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등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은 신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금융기법들의 확산에 따라 진화하는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정적 경제성장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핀테크나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휴자금으로 벤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금융이 확대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문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가장 심각하다고 체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부문 중의 하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19대에서 제출된 대학구조개혁법은 꼭 필요하지만 단순한 정원감축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업 능력과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대학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교육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초중등 학교를 개방해서 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불만이 쌓인 학부모들도 사교육의 부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상의 개혁들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사회의 기존 문화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사회경제적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4대부문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를 회피할 수 없다.

2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적극 도모해야

20대 국회가 한편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은 사회통합이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앞으로 있을 개혁과정에서도 개혁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결국 현재의 기득권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계층 간 이동성이 줄어들면서 계층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분위기가 팽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억제할 수 있는 계층 간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여 이를 위한 계층별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샌드위치세대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자식과 부모부양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계층이다. 이들은 자칫 빈곤층

SPECIAL 01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사회 주류가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쟁력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세대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세계화된 세대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투자가 완전히 매몰(sunk)비용이 되는 것이다.

으로 편입되면서 사회가 부양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건강하고 일을 더 할 수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지나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이들을 사회의 존적인 계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피부양 계층에서 생산계층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도 사회적 소외감을 떨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노인빈곤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연금적립이 가능하게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의 발달, 공장자동화 등의 산업화에 기인한 근로소득 하락에 따라 중산층이 붕괴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은 근로자임금을 더 끌어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학력화하는 여성인력의 활용측면에서도 이제는 효과적인 여성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성보호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제정에 그쳤으나 이제는 법의 효과성을 따져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복잡한 사회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혼모나 여성가장에 대한 보호,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생계 및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을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기회형평성을 개선한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의 실질적 주역이 되면서 남한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비용도 최소화된다.

넷째, 일반인들의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과 빈곤을 억제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청년들이 능력과 재능만 있으면 조기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고용부가 아니라 기업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의 역할이다. 사회에 조기 진출하면 경제적 독립도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결혼과 출산도 빨라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사회 주류가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쟁력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세대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세계화된 세대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투자가 완전히 매몰(sunk)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들을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등으로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거국적 투자 활성화 정책을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

노동개혁법안 등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리하지 못해서 실행되

지 못한 제도들이 많다는 것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몫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어느 국회 회기 때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상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제1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직접적인 단독 협의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제3당인 국민의당과의 합의가 있어야겠으나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경제 및 재정의 상황을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면서 국회를 인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대 국회 전체는 국정 책임을 더 이상 정부 책임으로 미룰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재선 혹은 다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이나 법안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로 인하여 정부 정책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여당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회'의 위상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20대 국회의 다선의원들은 기존의 국정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선의원들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국회에 투영시킴으로써 더 발전적인 정책을 실현시켜서 202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의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2020년에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10년은 전적으로 20대 국회에 달렸다.

SPECIAL 02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말 많고 탈 많던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곧 20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이때쯤이면 으레 새 국회에 이러저러한 주문과 당부, 그리고 격려를 하게 마련이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법률 제정과 예산 통제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꾸리는 나라살림을 챙기는 것은 마땅히 국민의 대표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양대 임무 중 나라살림 챙기기를 지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필자에게 요구한 것 역시 나라살림 챙기기에 대한 것, 바로 경제·재정 과제다. 의뢰받은 사람은 의뢰한 사람의 요구에 따르는 게 원칙이니, 이 글도 경제·재정 과제를 주문하는 게 온당하다. 그런데 경제와 재정 문제가 순전히 돈으로만 풀리지는 않는다. 경제와 재정 문제 중에는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들이 제법 많다. 그러니 경제와 재정 문제 해법의 상당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정치적 논의를 거쳐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

서 이 글에서는 경제·재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돈과 관련된 주문과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당부도 하려고 한다.

흔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기준을 사용한다. 두 기준 중에 해야 할 일을 정할 때는 중요성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급성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중요하지만 좀 더 시급한 것은 현안과제가, 시급성이 조금 덜 한 것은 중장기과제가 된다.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보자.

1 시급한 현안과제 1

전문가들에게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 현안 과제는?'이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재정적자 문제를 꼽을 것이다. 가정이든 국가든 살림살이의 기본은 규모에 맞게 쓰는 것, 즉 벌어들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며, 빚지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였다(물론 관리재정수지 기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쳐도, 위기 극복 후에도 계속된 것은 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현 정부의 증세불가가 재정적자의 주된 이유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겠다(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세수 확대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의 감세분은 거의 회복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세수 확대 정책은 감세가 없었더라도 해야 했던 것이므로 그다지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증세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제 대부분은 이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과연 경제성장을 통해 얼마나 세수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국세의 세수 탄성치, 즉 GDP가 1% 증가할 때 국세가 늘어나는 비율이 과거에는 1보다 컸으나 지금은 1보다 작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가정해서 1이라고 치자.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이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도 사고실험을 위하여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운용해서 추가로 2%P를 높인다고 가정하자. 그럼 세수도 추가로 2%P 더 늘어난다.

2016년도 국세 규모는 220조원 정도이니, 2%P가 더 늘어나면 4.4조원 정도가 더 걷히는 셈이 된다. 2015년의 재정적자 규모는 38조원이었으며, 올해도 크게 다르지

SPECIAL 02

경제성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증세 없이도, 성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 궁색하다.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시 낙관적으로 가정해서 올해의 재정적자 규모는 30조원 정도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경제성장률을 2%P 더 높인다고 쳐도, 총 재정적자의 12%만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증세 없이도, 성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 궁색하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웬만해선 선거 공약으로 당당히 증세를 내걸기 어렵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다른 당은 가만있는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증세하겠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 본격적인 대선 국면 돌입 이전에, 책임 있는 정당들이 합의해서 증세를 이뤄낸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

2 시급한 현안과제 2

'비정상의 정상화.' 이번 정부의 국정 어젠다이다.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겠지만 말인즉슨 백번 옳다. 민간의 일도 그렇지만 특히 국정을 다룰 때는 정상적으로 상식이 통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비정상적으로 몰상식하게 처리하면 안 되는 법이다.

그러니 20대 국회에서도 마땅히 비정상인 것은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시급한 재정 현안과제는 단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가 되겠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궁색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 같다. "어린이집은 '보육' 업무로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관할이므로 '교육'에만 쓰게 되어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은 위법"이라든가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도교육청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애초에 3~5세 유아교육(혹은 보육) 재정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했던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이 탄탄하게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제가 틀어졌다면 그에 입각해서 추진한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이에 대한 공방이야 익히 알려져 있으니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교육청이 부담하든 다를 게 없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내 아이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든가 혹은 마땅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든가와 같이 어느 한 쪽만이 옳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생각하면 스스로도 옹색하게 느껴질 주장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비

정상인 것은 맞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지만 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마저 훼손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교육청 주장대로 중앙정부 부담을 늘릴 수도, 중앙정부 주장대로 교육청이 모두 떠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은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화한 결과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바꿔야 하면 바꾸고, 합의를 이끌어야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정치고 국회의 역할이다.

3 바로 착수해야 할 중장기 과제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종종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혹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내가 중장기 과제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나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쭉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20대 국회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국회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 사회·경제의 현재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양극화도 심각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글에서도 틀림없이 할 테니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이들의 심각성은 예전부터 논의되었고 정부 대책도 진즉부터 쏟아졌다. 그럼에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충분치 않고 저출산·저성장은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정책적 노력을 덜 했거나 아니면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셈이 된다.

물론 사회·경제 문제 중에는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정책적 노력을 해도 나아지기 어려운 것들, 즉 '해결불가'인 것들도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도 '해결불가'는 아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경제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니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회가 꼭 했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해본다.

4 저출산·고령화 대비책: 일과 가정의 진정한 양성 평등

저출산·고령화는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회는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로 구성된다. 고령화는 비생산인구의 비중을 높인다.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인구 비중을 줄인다. 게다가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미래의 생산인구를 늘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출산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서 내년부터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신생아들이 생산인구가 되려면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저출산 해결과 함께 생산인구 비중을 높이는 다른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고령화로 감소하는 생산인구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혼여성, 특히 양육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임은 잘 알려져 있다.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역시 대부분은 보육지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정책이라고 답할 것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하고, 보육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잘못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은 통상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 하에, 직장 여성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대안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제가 잘못됐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 가사도 부부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 둘 다 일하는데 여성에게만 더 많은 가사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직장 여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남성을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려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단, 남성이." 그리고 "남

자는 무조건 칼퇴근해야 하고 초과근무는 여성만 해야 한다."

기업이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여성을 고용하면 남성에 비해 유무형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갖게 되면 업무 중단에 따른 비용이 초래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혼여성은 남성에 비해 퇴근 시간 이후 일을 시키기 부담스럽다.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성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망한 노릇이다. 내가 수업시간에 하는 말은 물론 과장이다. 하지만 내 말에 담긴 뜻은 분명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역시 일과 가정에서의 진정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육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음에도 출산율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여전히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유무형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의 으뜸은 사교육비다. 아울러 여성에게 더 많은 가사부담을 지우고, 직장에서 유자녀 여성을 꺼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큰 몫을 차지한다.

전도유망한 직장 여성이 결혼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한다.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내가 소속된 과에는 교수가 18명이 있다. 이 중 2명은 자녀가 셋이다. 물론 모두 홀벌이다. 교수들 중에

SPECIAL 02

혁명에 비견되는 양성 평등이 단기간에 쉽사리 달성될 리는 없다. 흔히 말하듯 사람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힘들다. 그러나 인식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변한다.

는 맞벌이가 많다. 우리 과 교수들도 절반이 맞벌이다(나머지 절반 중 싱글이 셋이다). 9명의 맞벌이 교수 중 2명만 자녀가 둘이고 나머지는 하나거나 아예 없다.

우리처럼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서구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성 평등이다. 양성 평등이 잘된 국가일수록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음은 잘 알려져 있다.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학자라고 할 만하다. 그가 2009년에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현대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① 저출산·고령화, ② 여성의 새로운 역할, ③ 지식기반경제에서 후세대 키우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혁명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서구의 양성 평등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혁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을 위한 혁명 전야에 해당한다.

혁명에 비견되는 양성 평등이 단기간에 쉽사리 달성될 리는 없다. 흔히 말하듯 사람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힘들다. 그러나 인식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변한다. 나는 일과 가정에서의 진정한 양성 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20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핵심 어젠다라고 믿는다.

5 저성장 대비책: 미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치

20대 총선이 본격화되기 이전, 3월의 최대 화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다. 알파고의 압승으로 대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 앞 다퉈 얘기했다. 정부 역시 발 빠르게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이란 것을 발표했다. 향후 1조원을 투자하고 민간투자도 2조 5천억원 이상 유치하고, 이를 위한 AI 개발 컨트롤 타워도 만들겠다고 했다. 글쎄,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컴퓨터와 인간의 바둑 대결이라는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기왕 하기로 한 것이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파고 이벤트에 앞서, 그보다는 화제성이 작지만 지식인층의 관심을 끌었던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 하나는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이고 또 하나는 작년 말에 나온 서울 공대 교수들의 집단 저작서 '축적의 시간'이다.

지난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IT 세상을 만든 디지털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며(참고로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에 의해 촉발된 산업변화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바이오 등 제반 기술 간의 융합으로 이뤄진

다. 예를 들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최근 많이 회자되었던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다. 다보스 포럼의 강연은 동명의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앞서의 산업혁명들보다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빠르며 더욱 넓고 깊다는 것,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디스토피아도 유토피아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골자다.

'축적의 시간'은 각자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공학자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평가한 책이다. 요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방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달했다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창조적인 '개념설계' 역량인데 이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는 한 때 "제조업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서비스업 시대다"라면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의 많은 부분에 수긍하고, 이 책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반가웠다.

이 책은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문을 담고 있다. 그 중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벤처기업이 클 수 있으며, 수직계열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하게 계약하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 그리고 이를 촉진하는 정부의 R&D 지원 체계와 공정경쟁 체계 정립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첨단 미래 산업이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를 전망했고 또 하나는 기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논의했으니, 포커스는 다소 다르지만 둘 모두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축적의 시간'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느낀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여기엔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 이르면 한편으로 암담해진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런지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 창의성의 싹을 자르는 교육 정책. 그리고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 발목 잡는 규제 정책, 무능력한 지원 정책 등등….

6 20대는 수준 높은, 일 잘하는 국회여야 한다

우리의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은 바닥권이다. 20여 년 전 모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듣는 사람에 따라 통쾌하기도 불쾌하기도 할 테지만 굳이 쌍심지 세우며 진위를 따질 일은 아니다. 다만 새삼 이 말을 끄집어낸 이유는 그 때와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라면 설령 진짜로 정부 3류, 정치 4류였어도 그럭저럭 사회가 지탱해갈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양성 평등 혁명 전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모방을 넘어 개념을 설계할 단계. 모든 조건이 대강 대강 해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때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정치와 행정의 수준이 경제사회의 성패를 좌우한다. 수준이 낮다면 어떡하든 높여야 하고, 일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공동체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다 같이 공공의 일을 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성격이 다르다. 행정은 실행하고 정치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수준 높은, 일 잘하는 국회는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20대 국회가 출범(出帆)한다. 항구를 나서는 배에는 축복을 보내기 마련이다. 한국호를 이끌어갈 300인의 선원들에게, 미래의 변화를 통찰하는 지혜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함께 하기를!

SPECIAL 03

NABO BUDGET & POLICY

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정말 위험한가?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1 가계부채에 대한 상반된 평가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자료(카드뉴스)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로 시작한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안심전환 대출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증가시킨 정책 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낙관해도 좋은가?',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 금융위의 설명이 타당하다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학자들의 한가한 기우(杞憂) 내지는 소위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큰 상처를 초래할 만큼 정말 우려해야 할 문제인가.[1)]

금융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

SPECIAL 03

NABO BUDGET & POLICY

우리나라의 공적부담금비율은 2014년 13.8%로 동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36.1%)의 거의 1/3에 불과하여 동 비율이 과소평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8위가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음이 분명하다.

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을 무시하는 것인지 또는 과장하는 것인지 현재의 시점에서 그 정답을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위험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외면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2006~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연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5%씩 증가한 반면에 가계대출은 8.3%씩 증가하였으며, 매년 소득 증가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은 평균 1.8배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즉 지난 10년간 매년 가계 전체로 보면 소득증가 규모의 평균 1.8배에 달하는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증가에 대비하여 부채증가의 빠른 결과로 가계대출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은 2006년 100%에서 2015년 128%로 높아졌으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2011년 1분기 35.6%에서 2015년 2분기 41.4%로 높아졌다.

유감스럽게도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OECD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국민소득계정)에 대한 가계부채 잔액의 비율을 집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동 비율이 여덟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로 가계부채의 국제적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각국의 공적부담금비율(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의 합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부담금비율은 2014년 13.8%로 동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36.1%)의 거의 1/3에 불과하다. 동 비율이 과소평가

표 1 가계대출과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 추이

(단위: 조원, %)

	가계대출			가계총처분가능소득			Ⅰ/Ⅱ (%)	Ⅲ/Ⅳ (배)
	잔액 (Ⅰ)	증가액 (Ⅱ)	증가율	규모 (Ⅲ)	증가액 (Ⅳ)	증가율		
2006	575	60.8	11.8	570	25.8	4.7	100.9	2.4
2007	630	54.5	9.5	599	28.3	5.0	105.2	1.9
2008	684	53.5	8.5	637	38.5	6.4	107.4	1.4
2009	734	50.7	7.4	661	24.1	3.8	111.0	2.1
2010	794	59.5	8.1	701	39.6	6.0	113.3	1.5
2011	861	67.6	8.5	741	40.7	5.8	116.2	1.7
2012	906	44.6	5.2	770	28.6	3.9	117.7	1.6
2013	961	54.6	6.0	809	38.3	5.0	118.8	1.4
2014	1,025	64.5	6.7	845	36.9	4.6	121.3	1.7
2015	1,142	116.8	11.4	889	43.5	5.1	128.5	2.7
평균	-	62.7	8.3	-	34.4	5.0	-	1.8

자료: 한국은행, Data base

●●●

1)금융위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동산동향 보고서, 특히 민간의 논의(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등은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에 대하여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동비율은 8위가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음이 분명하다.

3 낙관론의 근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나아지고 있다"는 금융위의 설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총량적으로 가계부문은 금융부채의 2.2배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한 가계의 총자산은 총부채의 5배를 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담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② 가계소득 5분위 중에서 상환능력이 양호한 4~5분위의 고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분포 구조에서 상환능력이 양호하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15년)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 중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1분위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며, 2분위 11%, 3분위 15%, 4분위 23.6%, 5분위 46.2%로 나타났다.

③ 은행 가계대출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부채비율(LTV)은 52%로 낮은 수준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다.

④ 가계부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해 가는 구조의 분할상환대출의 비

표 2 OECD 국가들의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2014년)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소득세+사회분담금 부담률(%)	금융부채/금융자산(%)
덴마크	304.9	36.1	46.8
네덜란드	273.6	29.9	38.4
노르웨이	223.9	28.4	74.3
아일랜드	207.4	19.7	-
오스트레일리아	205.5	24.1	-
스웨덴	173.4	24.7	31.8
캐나다	166.4	23.4	-
한국	164.2	13.8	44.9
영국	156.2	23.4	28.6
미국	113.4	25.6	20.7
독일	93.6	39.7	30.6

자료: 1.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OECD Data base
2. 공적부담금비율((소득세+사회보장분담금)/총소득): OECD Data base
3. 금융부채/금융자산: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2015.12. 그림 Ⅰ-8.

중은 2014년 말 26.5%에서 2015년 말 38.9%로 높아졌으며, 금리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4년 말 23.6%에서 2015년 말 35.7%로 높아져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었다.

⑤ 국민들의 신용등급이 양호하다.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4,327만명의 신용등급 분포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1~3등급 비중은 43.2%에서 47.5%로 높아진 반면에 4~6등급은 43%에서 41.5%, 7~10등급은 13.9%에서 10.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⑥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12월 0.78%에서 2015년 12월 0.33%로 낮아졌으며, 신용카드 연체율도 2012년 말 2.0%에서 2015년 11월 1.8%로 하락하였다.

⑦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용등급이 2.8등급으로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위기 우려론의 근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한, 가계부채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절대규모에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 전환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은 2012년 17%에서 2015년 24.2%로 크게 높아져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② 가계부채의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하락하고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으로 인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개선된 결과가 아니라 대출이 급증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2] 한편 정부가 2015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LTV, DTI)와 더불어 금리를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가계대출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014년 7월 연 4.35%에서 2015년 11월 3.38%로 무려 0.97%p가 낮아졌다.

③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가계부채 위험관리는 경기진작정책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처분가능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을 2013년 134.2%에서 2017년

129.2%로 낮출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완화와 4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144.2%로 오히려 동 비율이 10%p나 상승했다.[3] 즉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보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정책에 우위를 둠으로써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결과로 2015년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문제로 부각되자,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영향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태도가 소극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경기의 냉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금년 4월 28일 LTV와 DTI 규제완화 조치를 2017년 7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즉 주택경기의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을 후순위로 운영하는 한 가계부채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④ 가계부채 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원리금 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아져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설명은 가계부채 구조의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주도한 안심전환대출의 수혜자는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늘어난 월 상환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심전환대출자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반면에 금융순자산이 (-)이고 원리금상환 부담률(원리금 상환액/처분가능소득, %)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2년 136만 가구(12.7%)에서 2015년 158만 가구 (14.7%)로 높아졌으며,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표 3 각국 가계부채 구조조정 사례 요약

	대응시점	대응조치 내용					Deleveraging 경로 (부채/소득)
		이자 보조	주택압류 구제	상환 연기	부채 감면	대출요건 강화	
아이슬란드	조기·적극 (2008.10)	x	x	o	o	x	소득↑, 경기↑ (Beautiful)
영국	조기·적극 (2009.1)	o	o	o	x	x	소득↑, 경기↑ (Beautiful)
스페인	지연·소극 (2012.3)	x	x	o	o	x	부채↓, 경기↓ (Ugly)
네덜란드	지연·소극 (2013.1)	x	x	x	x	o	부채↓, 경기↓ (Ugly)

●●●
2) 감독당국이 발표하는 연체율은 분모가 대출금이기 때문에 연체 증가규모보다 대출규모가 클수록 연체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2016년 연구 기자회견(1월 13일)에서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잘 관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ECIAL 03

NABO BUDGET & POLICY

가계부채의 위험 여부는 경기침체의 정도와 장기화, 부동산시장의 냉각, 금리 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위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12년 247조원(37.7%)에서 2015년 27조원(34.7%)로 증가하였다.[4] 한계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은 평균 104.7%로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계 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한계가구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층이 차입가구 중 17.5%, 자영업 차입가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20% 가구의 22.9% 뿐만 아니라 상위 5분위 가구의 10.5%도 한계가구로 나타났다.[5] 따라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한계가구가 대거 부채상환 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12)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자영업자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는 2015년 6월 말 현재 519.5조원(차주 수 252.7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가계대출만 보유(이하 '純가계대출')하고 있는 경우는 24.8%인 128.9조원(126.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성격상 경기상태는 물론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승 등 경제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2년 5,937만원에서 2015년 6,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은 2012년 23.1%에서 2015년 30.6%로 높아졌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42.4%(2015년)로 높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잠재위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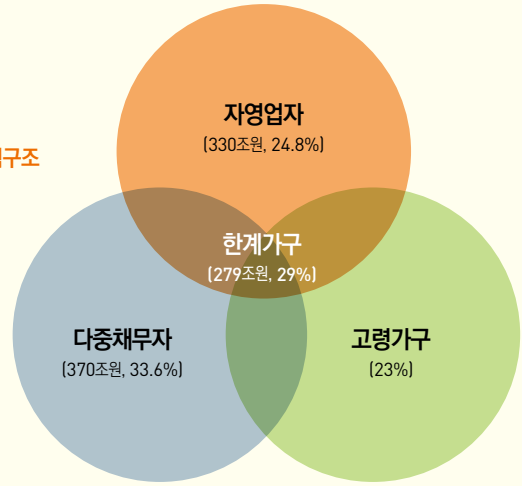
⑥ 2014년 8월부터 주담대 규제완화로 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비은행가계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즉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가계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다중채무자들은 이자부담 가중 등 대출조건 악화로 인해 더 강한 신용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차입규모(2015.11)는 370조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33.6%를 차지하며, 차입자의 수는 353만명에 달한다.[6]

5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견해

최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3월 24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위험에 대해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
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12, pp.34~35, pp. 99~103
5) 현대경제연구소,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2016.3.20.
6) 오제세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그림 1
가계부채의 위험구조



한국은행은 금년 4월에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서 경제현안으로 상위 부채가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저소득층에도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부채총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하위소득계층의 부채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KDI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2015.12)에서는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고령가구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상환 유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KDI부동산시장동향(2016년 5월)'에서는 '주택시장 서베이' 결과 경제전문가의 77.5%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44.8%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총량적인 위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으나, 가장 취약부문으로 보는 고령층이나 과다부채 가구와 같은 특정 취약계층의 위험 문제에 주목하고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대응에 소극적인 금융위의 입장과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하여 상당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가계부채 문제의 숨은 위험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크게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부문별로는 취약성을 안고 있고 전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위험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어떤 기관도 사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신뢰성 있게 판단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총량은 한국은

행 통계에 포착된다. 하지만 이 부채총량이 어떤 계층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상을 알 수 없다. 가계의 부채와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조사에 1만 가구를 표본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과소측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계부채 문제는 'known unknown'(존재는 알지만 위험의 확률분포는 알 수 없는)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부채를 정성적으로 지속하여 상환할 수 있다면, 부실 위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택가격대비 채무비율(LTV)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금비율(DTI)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지표들을 낮다고 해서 과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차입자의 부채 전체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위험 여부는 경기침체의 정도와 장기화, 부동산 시장의 냉각, 금리 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위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대불황시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지의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가장 먼저 버티기 어려운 취약계층인 저소득계층·고령층·영세자영업자에서 상환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어느 계층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 전반으로 급속하게 전이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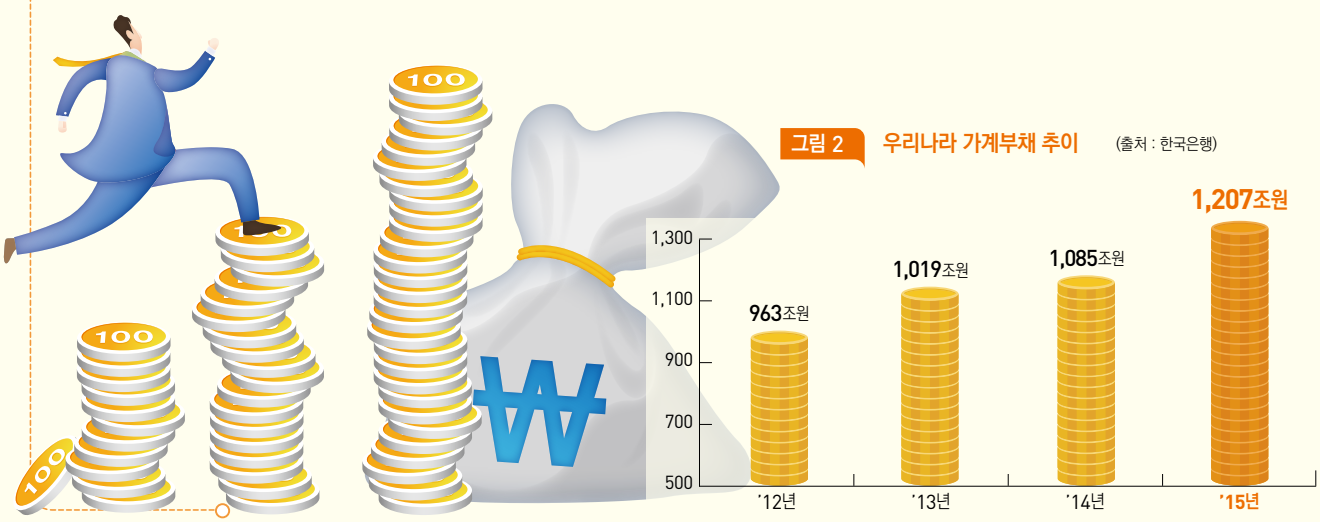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 (출처 : 한국은행)

7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표 3] 참조). 아이슬란드·영국·스페인·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정부가 선제적·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면서도 금융기관들의 부채 감소로 인한 경기와 가계소득의 위축을 수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과 경기를 진작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택가격의 하락 등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고 감독 당국이 대응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경기를 악화시켜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과다채무 가구나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저소득 과다채무자들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부채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제도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상환 연기와 조건부 부채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채 촉진효과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정책을 저소득·고위험 가계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8 구조조정개혁이 필요하다

끝모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IMF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취약부문과 저생산부문을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은 가계부채 확대를 경기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의 내재적 위험성을 크게 높였으며, 그 결과로 가계부채와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과제로 안게 되었다.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가계부채의 연착륙 과제가 갈수록 한국 경제의 갈길을 방해하는 힘든 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끝으로 금융위기의 역사는 금융감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7]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있음[8]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

7) "The greatest barrier to success is the well-entrenched tendency of policy makers and market participants to treat the signals as irrelevant archaic residuals of an outdated framework, assuming that old rules of valuation no longer apply", 「This time is different」, Carmen M. Reinhart & Kenneth S. Rogoff, 2009, p.281.

8)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조사해 왔던 미국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가 2016년 1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금융위기는 '人災'였다("We conclude this financial crisis was avoidable")로 시작한다.

SPECIAL 04

정부의 기업지원 방향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 과제

정부의 기업지원은 산업정책의 일부이다. 산업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산업부문 중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없는 부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1], 또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시장개입[2]을 말한다.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주로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다. 전통적인 산업정책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한다. 민간의 일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 결과는 기업이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경제주체의 이기심이 모여 시장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논리에는 여러 가정들이[3]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결과는 이론의 예측과 달리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치

최현경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팀장

유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역할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큰 틀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에 정책역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현대의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도 산업정책의 일부이며 당연히 시장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본고는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정책 중 세 가지 정책의 예를 들어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예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연구개발(R&D)지원정책 평가체계의 효율화 필요성, 마지막으로 미래선도기술 선점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다.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

중소기업정책[4]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지원을 언제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즉, 지원정책의 출구전략을 짜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이미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만 보더라도 24개의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정책, 11개의 금융지원정책, 22개의 기술개발지원정책, 7개의 인력지원정책, 18개의 판로지원정책, 13개의 수출지원정책, 3개의 컨설팅지원정책, 35개의 소상공인지원정책, 14개의 여성과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등을 포함하여 130여 개의 지원정책[5]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원기관[6]을 통하여도 170여 종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지원정책의 수보다 어떠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일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문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있다. 기업이 성장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지원이 없어지고 오히려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한 조사결과[7]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약 3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구조조

●●●

1) Pack and Saggi, "Is There a Case for Industrial Policy? A Critical Surve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21 No.2, 2016, pp.267-297.
2) Rodrick,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EPI Discussion Paper* 4767,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3) 완전경쟁시장, 정보의 완전성, 외부효과의 부존재 등이 있다.
4)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정의는 산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규모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law.go.kr))
5) 중소기업청,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6.
6) 지원기관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7) 전국경제인연합회(2012)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예정인 279개의 제조업체를 조사하였다.

SPECIAL 04

NABO BUDGET & POLICY

오랜 기간 시장에서 기술의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국내기업들은 기술의 선도자가 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신기술 개발 자체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선점하는 투자도 중요한 이유이다.

정을 고려하였다. 나머지 약 70%의 기업들 중 27.2%가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면 외형확대를 포기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 상시근로자나 자본금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25.6%만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응답하였다.[8]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거나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과의 경계선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서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이 기준에서도 기업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규모가 거의 상시근로자 300인에 달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지원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모든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이 단계를 넘어서는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보호와 지원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을 오랫동안 실행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에서 탈피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와 지원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수준의 기업조차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시도로 성장해 나갈 유인을 잃게 되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 태양광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시장에 진입하여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지원이 축소되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규모에 의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지원에 대한 기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8) 흔히 이러한 문제점을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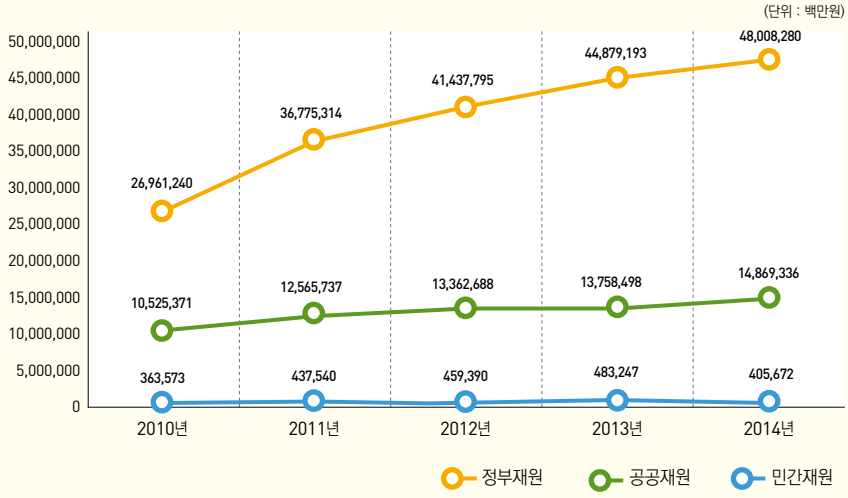
2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의 평가체계의 효율화

두 번째로 정부의 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정부 연구개발(R&D)지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R&D 63조 7천억원 중 약 23%에 해당하는 15조원[9] 규모에 달한다. 이 중 기업이 사용하는 R&D 정부 재원은 약 2조 6천억원[10] 정도가 된다. 이중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R&D 지원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 R&D 투자가 구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R&D 지원 정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알아서 투자할 의사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를 구축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구축효과의 존재에 대해 상반된 결론들을 보고하고 있다. David, Hall, & Toole(2000)[11]은 33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11개의 연구가 정부지원이 민간 R&D 투자에 대해 구축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남훈·고상원(2004)[12]과 김학수(2007)[13]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송종국·김혁중(2009)[14]은 중소기업에게 투자의 구축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2014년 KISTEP의 연구[15]에 따르면 정부 R&D 보조금이 1% 증가하면 기업의 총 R&D 투자는 추가적으로 0.1~0.2%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구축효과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R&D 지원정책이 시장의 역

그림 1 자금지원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액(2014년 기준)



할에 보완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R&D의 경우 그 본질상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매년 2~3조원의 비용이 드는 정책이므로 지원보다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정책이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해야 할 것이다.

3 미래선도기술 선점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시장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문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수립이다. 기업이든 정부든 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담당자는 임기 내 성과 도출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수립할 유인이 거의 없다. 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하여도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는 보다 예측 가능한, 즉 안전한 전략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민간의 경우 경영자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주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시적 주주는 투자의 단기 차익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장기로 봐서는 이익을 줄 수 있다하더라도 위험한 선택에 찬성하지 않는다.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할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만큼 개별사업 분야에서 빠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내하는 정도는 민간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이러한 장기 전략 부재로 인한 문제점의 예로, 현재 산업을 대체할만한 정도의 선도 기술 해외유출을 들 수 있다. 관련시장[16]에서 3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3차원 반도체 기술(핀펫-FinFET)[17]은 2001년 국내 연구팀이 최초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 반도체 1위 기업은 이 기술의 인수를 거부하였고 결국 인텔에 팔렸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기술에 큰 투자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에 밀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기업은 이후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최초 양산모델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외국의 경쟁업체보다 몇 년 늦은 출발이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기술의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국내기업들은 기술의 선도자가 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신기술 개발 자체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선점하는 투자도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도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된 선도 기술선점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선점을 위한 역할에 더하여 좀 더 크게는 임기를 뛰어 넘는 기간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보는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9) 정부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소, 국공립대학과 출연기관의 R&D 투자액을 말한다.
10)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5.
11) KISTEP,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KISTEP, 2014. 재인용.
12) 권남훈고상원,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직접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연구원, 2014.
13) 김학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7.
14) 송종국김혁준,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15) KISTEP,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KISTEP, 2004.
16) 낸드플래시메모리 시장.
17) Fin Field Effect Transistor.

SPECIAL 05

NABO BUDGET & POLICY

고령사회 진입과 재정 건전화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재정정책과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의 眞面目을 내가 처음 엿보았던 것은 2000년이었으니,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2000년 당시 우리사회는 고령화 비율, 즉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인구 비중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갓 진입한 상태였다. 거기에다 IMF 경제위기의 여파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겹쳐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때였다.

나의 연구 박종규, 〈「長期 巨視-財政 模型(KIPF00A):公的資金의 財政收支에 대한 長期的 影響」, 연구보고서 00-11, 韓國租稅硏究院, 2000〉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를 계속 부진하게 만들고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구조요인이었다. 그 때는 통계청 인구전망이 2030년까지여서 경제·재정전망도 2030년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난 뒤인 202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로 접어들며, 물가는 하향 안정,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둔화로 경상수지는 매년 대폭의 흑자, 국제수지 흑자로 환율은 지속적인 절상압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었다. 일단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나면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팽창시키는 정책실험을 해

SPECIAL 05

NABO BUDGET & POLICY

널리 알려졌듯이 "고령사회 진입" 이후 8년 뒤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3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돌파한다.

보아도 전체적인 그림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국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는 소리 아닌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당시 널리 膾炙되던 부동산 버블 때문도 아니요, 금융구조조정의 지지부진함 때문도 아닌,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었음을 처음 깨달았다.

1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

그렇게 말로만 들어오던 "고령사회 진입"이 불과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개막되는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은 20대 국회 임기(2016~2020년) 동안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일 것으로 생각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고령사회 진입" 이후 8년 뒤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3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돌파한다. 그리고 2060년이면 열 사람 중 네 사람(전체의 40.1%)이 65세 이상, 열 명 중 두 사람(전체의 17.2%)이 80세 이상인, 일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사회가 된다. 그런 사회는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그 어떤 나라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겪어본 적도 없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는 사람들의 관습과 사고방식도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세입·세출구조로는 그러한 인구 고령화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2016

년 42.3%에서 2060년 62.4%로 올라간다면서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는 정책시사점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 전망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엄밀한 방법론을 써가며 최대한 정확을 기하려 애썼을 것임은 틀림없겠지만, 아무래도 내 눈에는 이 전망결과가 너무 낙관적으로 읽혀졌다. GDP의 60%대의 국가채무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망이 맞다면, 재정건전화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2060년 국가채무를 GDP의 60%대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뜻이다.

나는 정부의 이 전망이 맞기를 바라지만, 이 전망처럼 2060년까지 우리 재정이 무사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른 근거를 찾을 것도 없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층인 34세에서 54세까지의 사람들이 2060년이면 2012년의 절반(47%)이 사라진다는 것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구조의 일대 개혁 없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安逸한 생각이다.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에 마쳐야 하듯이, 고령화 대비 또한 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6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5%p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2012년에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결론이었다. 세입기반 확충을 주로 하되 부가가치세 인상은 재정건전화 대책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뒤로 미루라는 권고였다. 그렇게 하여 세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복지지출에 충당하려 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에 써야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은 이미 틀리기 시작했다. 2015년 국가부채를 GDP의 33.7%로 보았었는데 지난달에 나온 정부결산상 실제 값은 GDP의 37.9%였다. 3년 만에 예상보다 4.2%p나 커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더더욱 遙遠해질 수밖에 없다.

2 고령화 대비 위한 과감한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지를 闡明했다. 晩時之歎이나 바람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재정준칙이다. 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재정은 건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p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줄곧 채택해오던 재정건전화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p 씩이나 낮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지출 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만약 정부가 그 준칙을 정말로 지켰다면 재정여건은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강도 높은 준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재정은 왜 건전해지지 않았을까?

이 방식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다음 년도의 총수입(내지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총수입을 번번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다보니, 그 증가율보다 2~3%p씩 낮게 총지출 증가율을 잡았다 해도, 실제 총수입은 전망보다 낮게 나왔고 재정건전화는 물 건너가곤 했던 것이다.

다음 연도의 총수입을 100% 정확히 전망한다하더라도, 그리하여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정말로 2~3%p 낮게 유지하여 재정건전화의 가시적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 방식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총수입이 활발하게 증가하는 경기호황시에는 지출을 그만큼 더 늘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열된 경기를 더 부양하는 한편, 총수입이 둔화되는 경기불황시에는 지출도 그만큼 둔화시켜야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문제점이다. 경기변동을 더 증폭시킨다는 의미다. 경기변동의 폭을 진정시키는 경기조절기능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총지출 증가율을 잠재 GDP 성장률에 연동시키는 것이 나아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속성상,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크게 빗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잘만 설계한다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거나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 잠재성장률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이는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그런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준칙을 검토조차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지출을 잠재성장률에 연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990년대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장기침체가 시작되자 일본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경기를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수년간 연속적으로 과감한 지출증가와 감세를 반복했었다. 그 결과 선진국 중 최고의 건전성을 자랑하던 일본 재정은 불과 10년도 안되어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추락했고, 그 결과 경제의 펀더맨털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령화 진입이 目前에 있고 재정적자가 매년 20조원이 넘는 지금, 필요한 대책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성장률이 3%를 넘기냐 아니냐에 焦眉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 정부가 의미 있는 재정건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란 안타깝게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 지금의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위해 안타깝다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든가 증세를 하던가 하는 것은 경기가 호전된 다음에라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처럼 경기가 몇 년째 遲遲不進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간 경기를 더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예상된다. 이런 반론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호소력이 강한 반론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냉정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률이 충분히 높아지는 시절이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무작정 그런 시절을 기다리다간 일본의 前轍을 밟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기만 하다가 재정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차라리 당장의 고통을 堪耐하더라도 과감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지 모른다. 이 판단은 결국 20대 국회의 몫이다.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미래세대와 우리 재정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낮은 고용률

고용률 60.3%, 2015년 15세 이상 인구 중 6명만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1964년 51%에 불과하던 고용률은 고도성장과 함께 지난 반세기 동안 매년 0.13%p씩 상승하였지만 OECD 회원국 중 20번째로, 경제발전단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의 장기추세를 보면, 1963~1984년, 1984~1998년, 1998~2009년 그리고 2009년~현재까지 4개의 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첫째와 둘째 주기에서는 최고 고용률이 58%와 6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셋째와 넷째 주기에서는 60%를 전후한 수준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 이후 십여 년 동안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1969년 75.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1.1%까지 매년 0.05%p 하락하는 추세이다. 여성 고용률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이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로 1964년 34%에서 매년 0.29%p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지만, 2015년 현재 50%를 밑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20%p를 넘는 남녀 고용률 격차는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고연령층(55세 이상)의 고용률은 최근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55~59세 고용률은 2000년 62%에서 2015년 71%까지, 60~64세 고용률은 2003년 52%에서 60%까지 상승하였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2000년대에도 29~32%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980년 45.7%에서 매년 0.1%p 하락 추세를 보여 2015년 41.5%로 낮아졌는데, 2013년 40%를 밑돈 적도 있다.

15~19세 청년층 고용률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1980년 27%에서 2009년 5.4%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 8% 가까운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긴 하였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로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복무를 하는 20~24세 청년층 고용률 역시 1990년 중반 60%에 근접하였으나 2013년 43%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 46%로 다소 상승하였다.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980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70%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5~29세 남성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 88%에서 매년 0.6%p 하락하여 2015년 6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이 연령대의 여성 청년층 고용률은 31%에서 고학력화와 혼인 및 출산의 연기 또는 기피 등으로 매년 1.2%p 상승하여 69%에 이르렀고 성별 고용률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는 다양한 불평등 또는 격차를 초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또는 노동시장 양극화이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금지니계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는 1980년 0.375에서 1994년 0.277까지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지만, 그 이후 2008년 0.3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0.344에 이르고 있어, 최근 임금 측면에서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980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70%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의 임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분위수 배율 역시 1994년 3.6배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 4.8배까지 상승하여 임금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8월) 자료를 이용한 임금지니계수는 2010년 0.352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 2015년 0.33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임금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라 불평등도의 추이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격차의 추이를 몇 가지 주요 요인별로 살펴보자. 먼저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보면, 10~29인 사업체의 평균 임금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1980년대 10%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30% 이상, 2000년대에는 50% 가까이, 최근에는 68%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1980년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1990년대 말 6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65% 정도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를 보면 대졸 이상 대비 고졸의 상대임금 역시 1980년대 40%대의 낮은 수준에서 1994년 64%까지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65%를 전후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32.5%를 차지하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근로자 대비 상대임금은 54%로 2004년(6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규·비정규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이 74%(고용보험)~85%(건강보험)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37%(국민연금)~44%(건강보험)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낮은 고용률의 구조적 원인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원인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시장 현안을 살펴보자.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면, 수급연령에 앞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조기퇴장하는 관행은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의 과다한 창업과 단기간 내 폐업을 통해 고연령층의 고용률과 빈곤율을 동시에 높인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원국 중 1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중구조는 청년층의 과도한 고학력화 및 중소기업 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게 되고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의 병존현상을 일으키는 한편, 노동시장 조기퇴장 관행과 맞물려 노동생애를 단축시킨다. 일정 수준의 생애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짧은 노동생애 중 장시간근로를 선호하게 되는 반면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로시간 제도 등 일·가정 양립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유인은 줄어든다. 기업 역시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통한 업무수행을 선호하고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일반화시켜 여성에 불리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내부자·외부자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맞물려 고용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내부자로 하여금 이를 보호하는 기제로서의 노동조합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직적 노사관계가 유발된다. 내부적으로는 외부자의 신규채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원하청관계에서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노동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시켜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고용의 과소화와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및 고용안정성 격차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용률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

현 정부는 2013년 6월초 일자리정책의 기조를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라는 4개의 핵심전략을 통해 2012년 64.2%에 불과한 15~64세 고

용률을 2017년 7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문화 소비, 내수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위해 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등 3대 개혁과제를 내걸었다.

특히 장시간근로 개선에서는 2,100시간을 상회하는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도한 연장·휴일근로를 합리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범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에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스마트워크 확산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15~64세 고용률은 2009년 62.9%에서 2015년 65.7%까지 급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선택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목표와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단의 변화 없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고용률 70% 목표는 2020년대 중반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고령화·지식·정보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동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엄중'하나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대타협을 마무리하였다.

합의문에 포함된 5가지 구조개선 과제는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이다. 3대 현안은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이다.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 및 2020년까지 전산업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

지금까지 낮은 고용률의 현황과 원인 및 불평등의 심화와 이를 타개하려는 정책노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간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과 고용 간 관계의 고찰을 통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제 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돕고,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적극적 고령화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장시간 근로의 해소와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 등 근로문화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OECD 자료(2014년)를 분석하면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 줄어들 때 15~64세 고용률은 1.6%p 상승하고, 특히 여성 고용률은 2.4%p나 높아지며, 파트타임 근로의 비중이 1%p 상승할 때 고용률이 0.5%p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상당한 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자리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임금분배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면 소비지출, 특히 내수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를 늘리고, 기업은 설비가동률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을 통한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임금분배율을 높이고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분배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 넘는 수준이니 임금 또는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거나, 내수시장이 작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수출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임금 인상은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없다거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노조조직률이 낮으며 분산적인 기업별 임금교섭체제에서는 임금 상승만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의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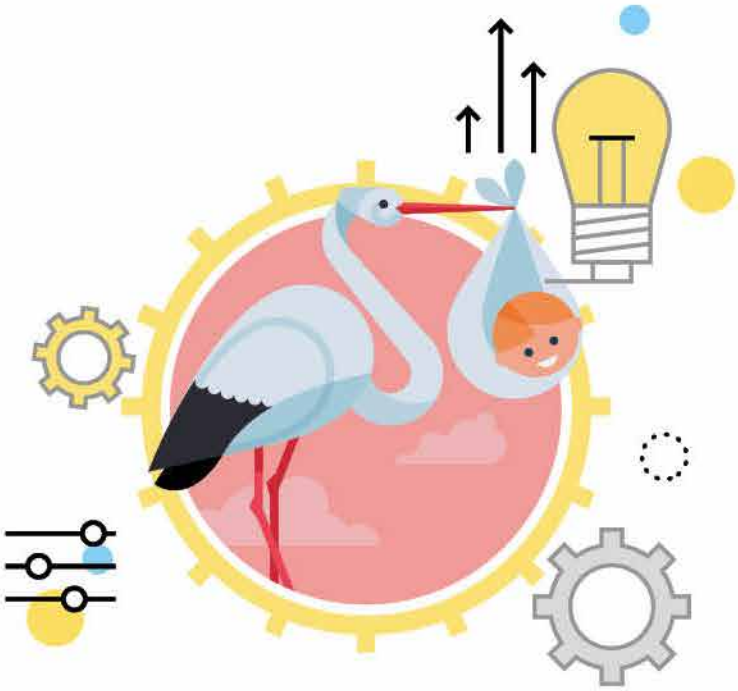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특히 장시간근로의 해소와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 등 근로문화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임금 인상 자체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 이를 통한 수출 확대, 투자와 고용의 증대, 그리고 성장의 촉진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를 중심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론이 지난 반세기에 걸친 경제발전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및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지금, 이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대안을 둘러싼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현실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정책과제

저출산 극복을 중심으로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합계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한 지 15년이 지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초저출산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예가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초저출산의 장기적인 지속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2006년에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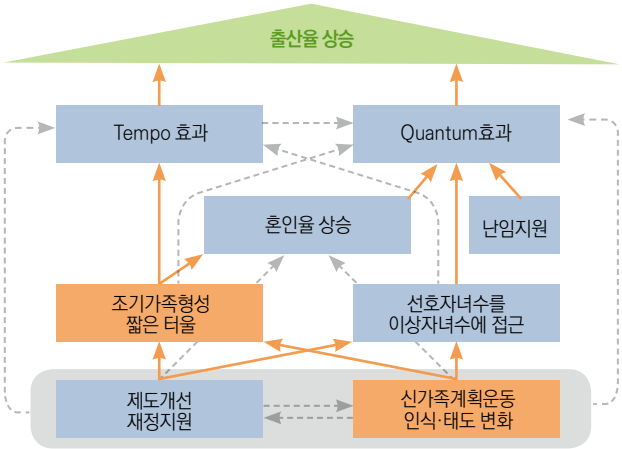
장기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예산 투입의 효과도 낮고, 지금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적어도 이삼십년)에 노동력 투입이 가능하므로 바로 효과가 있는 노동력수입 즉, 이민정책으로 인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숫자계산에서는 논리적이지만 우리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상 자유스러운 이민사회형성은 저출산 극복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

얼마 전(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 출산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정부가 지금은 출산율 회복을 주장하는 데 국민(적어도 여성계)의 저항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결혼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제기는 직접적으로 고령화에 있지 저출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감소한다고도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인구감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60세에 못 미쳤으나 지금은 80세를 넘었고, 2050년이면 90세에 도달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노인인구를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1955년 이후 20년간 이어졌던 베이비붐[1] 세대가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서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것이다(김태헌 2008).

정부는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를 각각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점진적 출산율 회복"으로 막연한 정책목표를 제시(대한민국정부 2005·2010)하였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4년의 합계출산율 1.21명을 2020년에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앞당기고, 혼인율을 높이며, 난임지원으로 출산을 늘리고, 개인의 희망자녀수를 높여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거 「제1,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어진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지만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어떤 과제를 수행하였던 결과가 1.5명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2020년 합계출산율 1.5명)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히 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먼저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개인의 선택(결혼과 출산)이 함께 하는 구조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1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수의 추세는 1960년을 정점으로 하는 1955~1960년대 중반까지와 그 후 1971년을 정점으로 하는 1974년까지의 두 기간에 걸쳐 집중되어 있다. 베이비붐을 특정 기간 동안 출산율이 급등하고, 출생아수가 급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1960년과 1971년 전후의 출산율 급증시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출생아수가 80만 명 이상으로 급등한 1955~1960년대 출생아수가 극저(약 92만명)에 도달하는 1964~1965년까지와 그 후 출생아수가 급증하여 1970~1971년에 100만명이 넘었다가 감소하여 80만명대로 급감한 1975년 전(1974)까지 총 20년간(1955~1974)을 베이비붐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태헌 1910).

2) 출생아수로 결정되는 Quantum 효과가 출산율을 높여준다는 것은 바로 이해되지만 출생시기인 Tempo 효과에 대해서는 의아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어떤 해의 출생아수가 1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사회 사정으로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면서 9만명만 태어났다고 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원하는 자녀를 출산하지만 출산을 연기한 그 해의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 상승의 메커니즘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언제 출산하느냐에 따라 출생아수가 달라지는 시간(Tempo)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몇 명을 출산하느냐를 결정하는 양(Quantum)의 효과이다([그림 1] 참조).[2)]

시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산시기이다. 대부분의 출산이 혼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혼시기가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결혼 후 첫 출산을 언제 하느냐 또는, 첫 아이를 낳은 후 둘째를 언제 출산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편, 양의 효과는 출산이 주로 혼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혼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 늘어나는 난임도 주요 요인이 된다. 가장 큰 변수는 기혼 여성의 출산자녀 수가 몇이냐 하는 것이다.

[그림 1]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서 출산율을 올리려면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시간의 효과를 높이려면 결혼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결혼 후 첫 출산과 그 후의 터울이 줄어야 한다. 양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혼내 출산이 중심이므로 우선 결혼을 많이 해야 한다. 난임부부 수의 증가를 최대한 예방하고, 의학 및 심리학적 치료를 통하여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기혼 여성의 출산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1980년대 이래 2.3~2.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김승권 외 2012). 그러나 기혼 여성의 희망자녀수는 2012년에 1.5명으로 그 차이가 거의 한 명이나 되었다. 이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출산율 상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에 14.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 금액의 약 85%가 보육에 집중되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출되었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서 출산율을 올리자면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가능해진다. 시간의 효과를 높이자면 결혼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결혼 후 첫 출산과 그 후의 터울이 줄어야 한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양의 효과를 높이는 데 투입하였지만 「제2차 기본계획」이 끝난 지금까지도 합계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보육환경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확실히 출산을 더 한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고, 2015년 여성 초혼연령(30.0세)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2, 3년이나 늦어지면서 시간의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쳤기 때문이다(통계청 2006·201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출산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인이 선택하는 대상인 결혼과 부모됨을 위해서는 하나의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결혼과 부모됨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미래의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선택하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에

진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결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취업, 주거, 결혼비용 등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편, 양의 효과를 늘리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으로 출산을 늘리고, 기혼 여성의 희망자녀수를 이상자녀수로 올릴 수 있는 여건(보육, 교육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인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은 결혼을 수월하게 하고,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아무리 정부지원이 많아도 본인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출산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결혼의 가치, 출산 및 가족의 가치의 변화가 함께 할 때 실제 출산이 이루어진다. 국민의 인식과 태도변화는 담당기관이나 몇 명의 담당자가 주장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대상 국민운동이 확산될 때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 때 정부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제한적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면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15년에 14.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부족한 곳뿐이다. 사각지대가 많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 요청이 강한 곳 등은 사라지지 않을 기미다. 그러다보니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확보노력은 계속 되겠지만 주어진 재원으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목표 출산수준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도 연구기능의 강화로 효율적인 투자와 평가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민운동을 유도하며, 거국적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의 강화와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기능의 강화

연구의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다. 출산율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저출산 대책의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분석하고,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제시되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의 결혼출산지원을 위한 과제들 중에서 대부분은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단순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포함된 경우이다. 이러다보니 예산의 집중이나 효율성의 제고에 한계가 나타난다.

정부의 예산확보노력은 계속 되겠지만 주어진 재원으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목표 출산수준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분야별 전문 국책기관의 참여로 다학제적 접근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지만 인구학과 인구정책을 다루는 중심연구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전문연구기관의 협력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인구정책 담당연구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서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발족하여 출산억제정책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81년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의 통합과 1989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기능의 통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편되면

서 인구분야연구는 보조연구부서 정도로 존속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연구기능을 강화하였으나 정책수립과 추진실태 및 평가에 집중하고, 기본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가 출산율 변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면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 두 요인의 조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출산율 회복에 가장 적합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또는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결혼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결혼의 장애요인인 청년실업, 주거문제, 결혼문화부담 등의 요인의 장애정도를 분석하고, 대응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무엇부터 얼마씩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명확해질 것이다.

연구분야의 강화는 주어진 여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특히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기능을 높이려면 "(가칭)인구정책연구원"과 같은 인구 및 인구정책에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설립과 인재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운동으로 승화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있다. 문화의 변화와 인식과 가치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각 계의 대표가 모여 일회성 행사[3] 로만 끝난다면 외형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 가족가치관 형성으로 출산율 회복까지 이어지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승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과거 출산억제정책[4]에서와 같이 전 국민대상 전국적인 홍보·교육과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민간·지역·정부의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각 계가 하나 같이 자신의 조직과 기관의 미래를 위한 직접적인 참여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출산'은 내수를 늘리고, 장래 양질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종교계에서는 교리에 따라 선남선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룬다는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교세의 확장과 진리의 실천을 기대한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가 변화하고, 생명존중과 친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총괄 중앙조직 운영과 전문가 양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모든 부처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고용부의 청년고용, 국토부의 주거지원, 여가부의 가족지원, 교육부의 초등돌봄 등을 비롯하여 인사, 예산, 안전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주관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운영지원단(단장: 인구정책과장)에서 담당하며, 우리나라 전 행정조직의 협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존업무를 기본계획에 연계하여 개편하거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업무에 우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한된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나 확대를 위한 예산의 우선배정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태

●●●

3) 과거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나 행사로만 그친 사례는 진실성의 부족으로 출산율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만 남겼다.

4) 과거 출산억제정책을 위하여 가족계획운동을 할 때 마을단위 조직(예, 대한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중심이 되어 가족계획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주민 모두에게 확산하였으며, 학교인구교육에서 초중고 교사 전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인구교육 필수화와 대학에서의 '가족계획'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근본적인 실천 중심의 전 국민대상 정책을 수행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수립단계나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처음부터 저출산 대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행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고, 민간, 지역, 정부가 모두 주체가 되어 협력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조직과 리더쉽이 필요하다.[5] 그러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대통력 직속으로 설치하고, 중앙정부 전 부처가 공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쉽을 담은 조직의 운영이라야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이 힘을 받을 것이고,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6]

한편, 중앙 및 지방조직에서 다양한 과제를 담당하자면 인구정책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이다. 2000년대 초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인구정책의 전문가 양성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수시이동으로 전문성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정책 담당자의 경우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면 늦었지만 인구정책전문대학원(가칭)을 설치하여 인구학, 인구정책, 인구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전문가로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 행정부의 협력을 촉구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아우르는 강력한 중앙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와 강력한 사업추진이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의 승화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력과 재정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미시적 연구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 회복은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부모됨을 개인이 선택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때 결혼과 출산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개인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시초는 2004년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전 부처의 참여와 새로운 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실 직속 사무국을 설치하여 정책연구, 과제개발, 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개편하여 2006년에 시작된 「제1차 기본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전 부처를 관할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가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6) 일본은 현재 합계출산율 1.42명을 단계적으로 높여 인구 1억명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1억 총활약상"(장관)을 신설하고, 사무국을 총리실 산하에 두어, 내각 수준에서 강력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승권 외,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태헌,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인구교육」 창간호, 2008.
_____,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국민연금포럼」 4월호, 2010.
대한민국정부,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2011~2015」, 2005·2010.
_____,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015.
통계청, "2005년, 201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보도자료 2006·2016.
_____,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인구정책 30년」, 1995.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중국 제조업의 급부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역사상 매출 감소세를 보인 적은 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총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과거 10% 이상에서 4%로 줄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1980년대는 6~7%대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줄곧 감소해 지금은 2%대로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들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차세대 성장동력' 또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1] 발굴·육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 세계 4위의 특허국 부상, 대형 및 OLED 디스플레이, 리튬이온전지 등 일부 상용기술 분야의 성과, 세계 일류제품의 시장성과 등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주력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관점 아래, 향후 정책당국과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현황과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 현황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전략'에서 처음 미래성장동력 확보 구상을 밝힌 후 2014년 3월,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뒤이어 2014년 6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의 분야별 추진 계획을 단계별 목표, 책임부처, 투자규모 등을 확정해 구체화하는 한편,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던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도 인력양성, 인프라, 산업생태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3월, 향후 본궤도에 진입할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19개 미래성장동력을 산업화 속도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한 다음 [표 2]와 같이 분야별 특성에 맞는 R&D 투자와 지원정책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5G이동통신,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등과 같이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그룹 1)의 경우 법·제도 개선 및 핵심 공통기술 개발과 시범사업 등으로 조기 사업화에 집중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 고기능 무인기, 빅데이터 등 상용화에 근접해 있지만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그룹 2)의 경우는 원천·실증 R&D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압직류 송·배전시스

템, 초임계 CO_2 발전시스템과 같이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그룹 3)는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실증·원천기술 R&D 등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 내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고 있는 과제들을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하나의 사업으로 그룹핑하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예산투입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

1) 여기서 성장동력(growth engine)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널리 확산, 적용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기술(new emerging technology) 또는 핵심 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을 지칭.

2)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2016),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제8회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2016.3.30.) 참조.

미래성장동력 주요 분야별 추진 실적과 평가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칙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도를 마련하고 제1호차 운행을 허가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바 있다. 무인기의 경우 시범사업 전용공역 5개를 지정한 데 이어 전기동력 태양광 무인기 EAV-3은 국내 최초로 성층권 비행에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영화관 양쪽 벽면까지 3면을 상영하는 다면상영시스템(스크린X) 개발·상용화에 성공하고, K-ICT 디바이스랩을 구축하여 스마트디바이스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기관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현재 해당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진입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표 3] 참조).

비록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핵심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의 1조 810억원에서 2016년 1조 1,870억원으로 9.2% 증액하고([표 4] 참조),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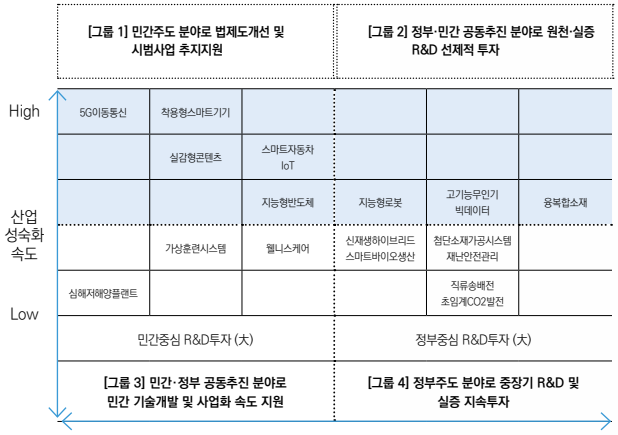
표 1 박근혜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 14대 전략산업 + 5대 전략산업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
스마트자동차(공)	지능형로봇(공)	맞춤형 웰니스케어(공)	융복합소재(공)
심해저해양플랜트(공)	착용형 스마트기기(공)	신재생하이브리드(성)	지능형 반도체(성)
5G 이동통신(성)	실감형콘텐츠(성)	재난안전시스템(성)	사물인터넷(성)
수직이착륙무인기(엔)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엔)	직류송배전시스템(엔)	빅데이터(성)
-	가상훈련시스템(엔)	초임계CO_2 발전시스템(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엔)

주: 위 개별 미래성장동력 우측의 (공)은 통합이전 미래부와 산업부 공동 추진분야, (성)은 미래부 단독추진분야, (엔)은 산업부가 추진하던 산업엔진분야를 의미

자료: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제4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2015.4.17.)

표 2 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구분



자료: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제4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2015.4.17.)

추진단장 협의회,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위원회,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성과 평가와 R&D 사업 관련 특허 및 심층분석 및 일부 사업재편 검토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과 성과 확산을 통한 신시장, 신산업의 출현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일반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 실현 또는 산업실현을 2020년 전후로 예상하고 추진한 점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주로 미래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확보를 위한 R&D 투자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R&D 투자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더라도 기업의 진출과 양산투자를 결정하기 전 무수히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신시장 및 신산업 창출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전략이 부족한 탓도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신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철강, 화학산업이나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발전시킨 자동차나 조선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규제가 미처 마련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표 3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추진의 주요 실적

[스마트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칙*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도('15.하) 마련 및 제1호차 운행 허가('16.3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실감형콘텐츠] 영화관 양쪽 벽면까지 3면을 상영하는 다면상영시스템(스크린X) 개발·상용화	
[착용형스마트기기] K-ICT 디바이스랩을 구축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전담 지원 ※ 수도권(판교), 대경권(대구), 전라권(전주), 충청권(오창) 개소	
[무인기] 무인기 시범사업 전용공역 5개* 지정('15.하), 전기동력 태양광 무인기 EAV-3 국내 최초 성층권 비행 성공('15.8월) *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대구 달성, 부산 해운대, 전북 전주	
[지능형사물인터넷] 'IoT 혁신센터'를 통해 국내외 기존 기업과 협력하여 Io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 이노온(주차장공유서비스), 더알파램스(스마트글래스), 나래IoT(화재예방)	
[지능형로봇] 병원용 물류로봇시제품 2종(대용량, 저용량) 개발('15.11월), DARPA 재난대응로봇 경진대회 우승('15.6월)	

자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제8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2016.3.30.) 심의안건 1호

표 4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산업	분야	2015 예산	2016 예산안	증감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36,824	61,424	66.8
	5G 이동통신	85,918	114,237	32.96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41,756	39,070	-6.4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25,242	22,300	-11.7
미래신산업	지능형로봇	96,324	95,339	-1.0
	착용형 스마트기기	5,000	5,000	0
	실감형 콘텐츠	63,702	65,892	3.44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51,578	52,113	1.04
	가상훈련시스템	8,029	8,800	9.60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맞춤형 웰니스 케어	39,893	44,458	11.44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25,214	35,980	42.70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8,000	15,398	92.48
	멀티미디어직류송배전시스템	-	-	-
	초임계 CO_2 발전시스템	-	-	-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61,663	53,613	-13.1
	융복합 소재	406,985	423,696	4.11
	지능형 사물인터넷	28,401	31,055	9.34
	빅데이터	15,500	15,504	0.03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80,949	95,009	17.37
합계		1,080,978	1,178,888	9.06

주: 예산이 없는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5.

한편, 미래성장동력 기반의 신산업이 창출되기까지는 정부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 기반한 인력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단기간 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새로운 주력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창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내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된 이후에야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향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한 우선적 검토 과제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과 추진 실적 및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해 정책 당국과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향후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현행 미래 성장동력의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전략적 R&D 투자사업의 과거 성과를 활용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특성과 현재의 진행 실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R&D 투자 대상을 이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R&D 투자사업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단기성과 창출형'과 미래의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신산업 창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성과를 주

미래성장동력 전략추진단과 같은 범부처 추진 기구를 설치,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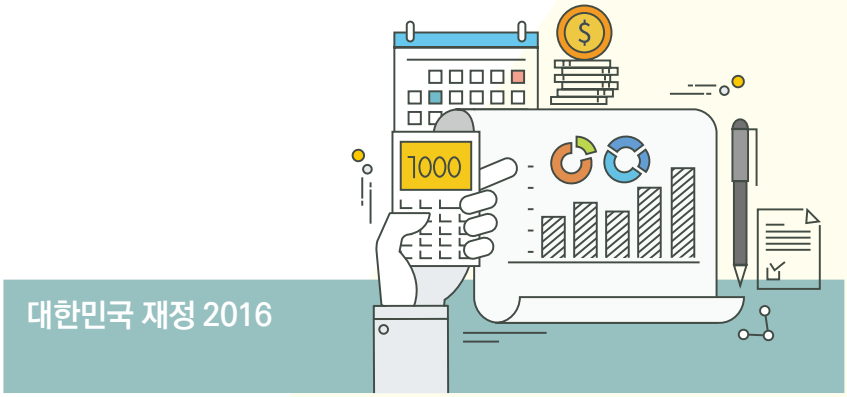
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5~7년 전부터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확보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대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핵심원천, 또는 융합기술 R&D 결과(특허와 상용화 기술 등)를 재검토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추가 R&D지원이나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투자 진출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사업 진출 및 투자 지연과 관계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규제프리존 설치 등 새로운 경제발전시스템으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강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R&D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외에도 수요 연계형 R&D 및 상업화 이전 단계의 정부구매(pre-commercialization procurement) 등을 통한 초기 시장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래성장동력과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망산업의 경우, 초기 양산화 단계의 투자규모가 큰 반면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미래성장 동력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된 금융상품과 펀드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인해 소진되지 않고 자금조성에만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패키지형 지원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형 종합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EU의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육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융합핵심기반기술 파일럿 프로젝트(multi-KETs Pilot Project) 또는 미국의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Program)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성장동력사업과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 재설계가 긴요하다.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확보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정책당국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어 온 각 부처 R&D 사업 중 일부 사업이나 해당 사업을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성장동력 성과가시화를 위해서는 주관부처 중심의 개별 성장동력별 정책추진보다 성장동력별·기능별 매트릭스 차원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활발한 신규진입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새로운 R&D 예산 배정 및 각 업종별 발전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산업과의 연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내 부처 간 정책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구, 즉 (가칭) 미래성장동력 전략추진단과 같은 범부처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추진체계에서는 개별 성장동력의 관점이 아닌, 산업생태계 조성관점에서 정책추진에 대한 종합평가와 인력양성, 새로운 성장동력에 부합한 인프라 구축, 세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당국과 국회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국가차원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추진체계, 법제도 구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과 정부와 국회의 공동노력을 통해서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 분석보고서



대한민국 재정 2016

국회가 심의·확정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수입은 391.2조원, 총지출은 386.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6.9조원 적자이다. 국가채무는 644.9조원으로 2015년 대비 49.8조원이 증가하여 GDP 대비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2001년 121.8조원에서 연평균 11.8%의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채무 관리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정부의 재정 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재정」, 「경제·재정 수첩」 등을 발간하여 주요 재정제도와 현안, 그리고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 2016」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확정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설서이다. 본 책은 제1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고, 제2부에서 2016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사내역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고,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주요 재정제도를 재정과정별로 설명하면서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제도 등을 추가하였고, 부처의 재정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아베정부 구조개혁의 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담고 있다. 또한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의 통화·재정정책, 노동시장 개혁, 제조업 경쟁력 제고, 재정건전성 유지 등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한 과감한 통화정책(제1화살)과 확장적 재정정책(제2화살)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베정부는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제3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입부진,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 재정흑자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특성, 경제정책 대응실패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당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 고착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차원의 재량적 재정지출확대를 지양하고 인구구조변화, 사회보장 지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베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인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등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외교역 측면에서, 일본의 TPP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도 산업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펼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8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최근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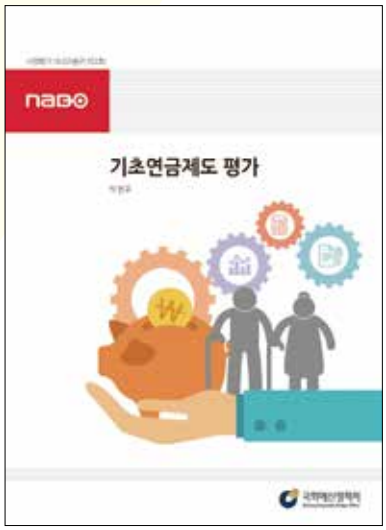
또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법정 의무지출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 경감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명목상의 노인인구수와 등록장애인수가 아니라 복지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수와 등록장애인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재정문제의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새로 자치구를 추가하되, 기초 시·군과 구분하여 별도의 교부액 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표준화하고 현재 재원에 '특별·광역시 보통교부세 자치구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본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소득분위별로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한편, 기초연금 재원(7조 8,600억원, '16년 국고기준)의 지역 간 분담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감에 대한 분석결과, 식료품과 보건의료 항목은 대부분 소득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가정용품과 오락문화 등 여가와 생활편의물품은 높은 소득분위에서 증가추이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

다만, 노인가구 소득 3분위 이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저소득층 노인가구 기초연금 수급의 역진성은 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의 기초연금 미수급 문제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할지 여부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전부 포함하는 현행방식 이외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취지, 재정건정성, 자활의 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분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재원배분 기준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행 국고 차등지원 기준의 현실화와 세분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전년도 지역별 수급자 수와 수급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재정분담률을 결정하는 귀납적 접근방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고령화시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평가 16-0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규모의 격차가 완화되고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가 지역기술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서 지역특화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완료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인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을 평가하였다.

지역산업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성장의 요인을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 지역효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산업의 성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지역별로 기존 산업기반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재정지원 이후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수익구조를 검토한 결과 중앙 및 지자체 정부의 수탁사업비가 연간 수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신규 지역기술거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성과가 있으므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산업 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R&D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기업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신 분석보고서

(2016. 5. 25. 기준)

구분	실·국	과	제 목	발간일
정기 보고서	예산 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2.5
		예산분석실	대한민국 재정 2016	3.14
		예산분석실	2016 경제 재정수첩	3.31
	경제 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9호)	1.29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0호)	2.16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1호)	3.7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1호)	4.18
		거시경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4.28
	사업 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16-01]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1.20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8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1.2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4.29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16-0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5.3
정기 간행물	기획 관리관	산업사업평가과	예산춘추 2015년 겨울호(통권 제41호)	2.4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5 연차보고서	3.4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nabo.go.kr

NABO

인생을 즐겁게 하는 유쾌한 이야기

LIFE

66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조선 최고의 관료경제이론가, 김육

72
트렌드 따라잡기
불안이 가중된 과잉근심사회와 '램프증후군'

76
직장인 심리상담소
타인과 상황 판단 시 인지적 오류들

80
그곳에 가고 싶다
남원 광한루

84
건강한 인생, 맛있는 식탁
가장 달콤한 독 '설탕' 섭취량부터 확 줄여라!
눈도 호강하고, 입도 호강하는 우엉 잡채

90
NABO 재테크
신용등급 올리는 '신용관리 방안'

92
취미생활 입문
자전거 하이킹

96
NABO인의 서재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백성의 생업 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조선 최고의 관료 경제 이론가, 김육

글/한정주(역사학자)

김육 초상

대동법 실시를 둘러싼 '대논쟁'

지난 세기말에 겪은 임진왜란의 악몽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17세기 조선은 또다시 병자호란의 재앙을 맞아야 했다. 이 두 전란은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양란 사이에는 광해군의 실정과 인조(서인 세력)의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던 농촌 경제와 국가 재정의 파탄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7세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이처럼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뛰어넘어 17~18세기 조선의 사회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사건은 '대동법의 실시'와 '화폐 유통'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양란과 뒤이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사회 경제를 복원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17세기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동법 시행과 화폐 유통이 한 조정 관료의 줄기찬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바로 효종 시절 영의정을 지낸 잠곡(潛谷) 김육(金堉)이다.

경제사학자들은 조선의 17세기를 '대동법을 둘러싼 대논쟁의 시대'라고 부른다. 대동법은 나라에서 현물(지방 토산물)로 받아 오던 공물을 쌀이나 베로 통일해 받은 일종의 '조세 정책'이다. 그런데 대동법은 1608년(선조 41)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시대를 거쳐 무려 100년이 지난 1708년(숙종 34)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내역에 관한 기록을 모아 놓은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대동법의 시행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중종 때 조광조가 공안(貢案, 공물을 기록한 문서와 장부)을 개정하자고 주장하였고 선조 때 이이가 수미법(收米法)을 시행하자고 청했다. 임진년(1592) 이후에는 유성룡이 역시 미곡을 거두는 일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조 41년(1608)에 이르러 비로소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마침내 선혜청을 설치했다. 인조 2년(1624)에 이원익이 다시 건의해 강원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했고 효종 3년(1652)에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시행했다. 효종 8년(1657)에 김육이 다시 건의하여 전라도의 해안 마을까지 확대 시행했다. 현종 3년(1662)에 김좌명(金佐明, 김육의 큰아들)이 청

하여 산골 마을에까지 아울러 시행되었고 숙종 3년(1677)에는 이원종이 건의하여 경상도 지방에도 시행되었다.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 관찰사 이언경의 상소로 황해도에까지 시행되었다.

–《만기요람》〈대동법〉

이 100년 동안 대동법은 조선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의 '화두'이자 최고의 '논쟁거리'였다. 왜 조세 정책에 불과한 대동법이 한 세기 동안이나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논란을 낳았을까? 그것은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위로는 조정의 고위 관료에서부터 아래로는 한 조각의 땅덩어리도 갖지 못한 빈농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양란과 정치적 혼란으로 붕괴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곧 '국가 경제 복원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 세력들의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세 수취 체제의 근본적 취약점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백성, 특히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공물, 곧 조세로 충당했다. 당시 조세 수취 체제는 각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 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조세 분담은 각 지방 군현의 가구 단위로 부과되었다. 그런데 이 조세 수취 체제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었다.

첫째, 조세 분담은 국가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수량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가뭄,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전란의 참화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면받기 어려웠다. 둘째, 공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 백성들로부터 몇 배에 달하는 공물을 더 받아내는 폐단이 생겨났다. 이같은 행위를 통상 '점퇴(點退)'라고 했다. 셋째, 그 지방에서 생산하지 않는 토산물을 공물로 부과 받은 경우나 수송과 저장이 곤란한 토산물의 경우, 또는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공물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상인이나 관리들이 해당 공물을 나라에 대신 납부해주었는데, 이때 그들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이윤을 붙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 같은 대납 행위를 두고 '방납(防納)'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폐단뿐 아니라 공물을 직접 납부하는 데 따르는 숱한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관리나 상인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湖西大同釐目錄序
君子之生斯世也幼而力學之學而欲行
之修其天爵以受人爵者豈獨爲利祿要
名譽哉將欲行其志而施於民也官無尊
卑苟有志於行其志則固當以聖賢之言
爲法行乎一邑則一邑之民安行乎一國
則一國之民安行乎天下則天下之民安
正心修身治國平天下之道乃聖賢教人
之法而歸澤斯民而已世之言臧意正心
之學者皆掇拾方冊之所載以爲意誠心

김육충청도대동사목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자 농민들은 집과 토지를 버리고 유랑민으로 전락하거나 도적으로 변해 조정에 대항했다. 조선은 나라 재정이 취약해지고 민심이 이탈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16세기 중종 때 조광조가 조세 수취 체제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나 임진왜란 이전 율곡 이이가 지방 토산물 대신 미곡(쌀)을 거두어들이는 수미법을 주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현상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기존의 조세 수취 체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조세 수취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전란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역 동원에 시달리다 못해 일정한 거처나 생업을 갖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동 인구의 증가는 조세 수취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선조수정실록》 34년(1601) 8월 1일의 기록에 나온 이항복의 발언을 보면, 전란 이후 토지를 경작하는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8년에 비록 경기도에 국한되었으나 대동법이 최초로 시행되고 다시 1624년에 강원도로 확대 실시된 것은 이러한 조세 수취 체제의 위기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대동법의 시행은 주요 곡창지대인 하삼도(下三道), 곧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제외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특히 광해군과 인조 시대의 정치 혼란과 병

자호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경기도와 강원도의 대동법조차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점퇴와 방납의 폐단이 더욱 극심해져 농민의 유랑민화 또는 도적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효종실록》 2년(1651) 7월 24일의 기록에 나온 효종과 조정 관료 이후원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효종 **남쪽 지방의 도적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후원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효종 **이들은 좀도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반드시 이들을 지휘하는 큰 괴수가 있을 것이다.**

이후원 **지금 만약 그들 삼남(三南) 지방의 도적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살아남을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효종 **명나라가 마침내 유랑하는 도적떼에 멸망하였는데, 이 또한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다.**

이렇듯 양란 이후 조선의 조정은 전후 복구 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가혹한 공물 납부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으로 인해 조세 수취 체제가 붕괴되고 국가 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같은 위기에서 김육이 사회 경제 개혁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삼남 지방에 대한 대동법의 전면 실시였다. 김육은 이 개혁 정책만이 점퇴와 방납의 폐단을 없애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부유하게 만들어 전후 국가 경제 복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육은 1638년(인조 16) 충청도관찰사가 된 후, 처음으로 충청도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김육의 건의는 기존의 조세 수취 체제로 인해 큰 이득을 얻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야 했다.

점퇴와 방납의 폐단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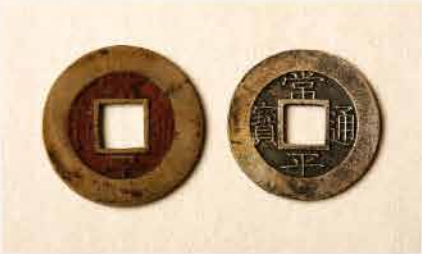
대동법은 기존의 조세 수취 체제에서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경제 개혁 정책이었다. 그 하나는 지방 군현의 가구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다. 가구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토지의 소유 여부, 또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공물을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소유할수록 이익을 얻는 폐단을 낳았다. 다른 하나는 지방 토산물을 거두어들이는 조세 방식을 일정한 수량의 베나 쌀로 통일해 납부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것은 지방 토산물(현물) 납부에 따른 점퇴와 방납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었다.

이같은 이유로 대동법은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일반 백성의 삶과 생업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반면에 그동안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물 납부의 부담을 일반 백성에게 전가시켰던 부호나 지주, 방납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누렸던 상인, 공물 수납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던 지방 관리들에게는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을 것밖에 없는 개혁 정책이었다. 특히 지방의 부호나 지주, 그리고 관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한편 자신들이 바로 대토지 소유자였던 중앙 고위 관료들 역시 대동법이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겼다. 이들은 거대한 정치 사회 세력을 이루어 김육 등이 내세운 대동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김육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 간에 '대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대동법의 시행 여부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육 등은 양란 이후 국가 경제를 복원할 수단을 백성의 삶과 생업을 안정시키는 데서 찾았다. 대동법은 그러한 국가 경제 복원 프로젝트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보수파 관료들은 신분 질서를 더욱 강화해 백성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고 유랑민과 도적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때문에 이들은 대동법 대신 호패법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대동법 대 호패법의 대논쟁

대동법과 호패법을 둘러싼 개혁파 대 보수파 간의 최초 논쟁은 김육이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기 15년 전인 인조 원년(1623)에 일어났다. 당시 유공량(柳公亮), 최명길 등 보수파 관료들은 백성의 유랑민화, 도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패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육, 조익(趙翼) 등 개혁파 관료들은 호패법은 사회 정치적 불안과 위기감을 한층 더 고조시킬 뿐이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대동법을 주장했다. 특히 김육은 호패법을 철폐하자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호패를 지니고 다니는 자에게 죄를 주자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내세웠다. 백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복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개혁파 관료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육 상평통보

그러던 와중에 김육이 충청도관찰사로 나가 대동법의 시행을 다시 건의하자 개혁파 대 보수파 관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사회 세력 간의 대논쟁이 재연되었다. 김육은 충청도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자마자 평소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건의는 지방 토호 세력과 양반 계층, 그리고 방납 활동을 하는 상인들과 관리들이 중앙 관료들과 결탁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인조 24년(1646)에 또 한 차례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와 세수입의 감소를 염려한 인조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인조 재위 기간 동안 대동법에 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효종 시대에 들어서자 김육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관료들은 또다시 삼남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올렸다. 조정은 다시 개혁파 대 보수파로 나뉘어 '대논쟁'을 벌이게 된다. 보수파 관료의 수장은 김집(金集)이었다. 조정은 공납제를 개혁해 대동법을 시행하자는 김육의 개혁 세력(한당)과 대동법을 반대하고 공납제의 일부 개선과 호패법의 실시를 주장하는 김집의 보수 세력(산당)으로 분열되었다. 온 조선을 들썩이게 만든 대논쟁의 결말은 '호서 지역(충청도) 실시, 호남 지역 불가'라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후 5년이 지나 김육이 다시 효종에게 호남 지역에도 대동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청해 해안 주변의 마을에서나마 대동법이 시행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듯 김육은 온갖 반대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끈질기게 자신의 개혁 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과 노력 덕분에 비로소 대동법은 국가 조세 체제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었다.

김육에 의해 뿌리를 내린 대동법은 단순히 조세 체제의 개혁에 그치지 않았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상공업과 시장 경제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방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제 시절에는 중앙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드는 관영 수공업 이외의 민간 수공업은 발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와 쌀만 조세로 수취하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 관청은 소요 물품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출해 공인(貢人)이라는 민간 상인에게 조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공인 계층은 관청과 민간 수공업을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관청에 납품할 물품을 주로 서울의 시전이나 지방의 장시들을 통해 조달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 수공업자들과 거래하거나 직접 수공업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농민들 역시 쌀이나 베를 마련해 조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다른 여러 농산물이나 물품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상업적 농업을 경험하거나 상품 교환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은 이렇듯 조선 후기 농업, 수공업, 상업의 생산 및

교환 활동을 자극하면서 시장 경제의 싹을 틔웠다.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들어와 조선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동법 같은 정책으로 양란의 후유증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새롭게 사회 경제적 활력을 되찾은 17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17세기를 들여다보면 훌륭한 경제 관료 한 사람과 좋은 정책 한 가지가 국가 경제와 백성의 삶을 백 년 정도는 거뜬히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조세 정의를 통한 분배론

김육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성장론자'라기보다는 '분배론자'에 가까운 사상가였다. 특히 그는 조세 정의를 통한 분배에 큰 무게를 두었다. 당시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몫은 백성이 납부하는 조세였다.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조세 납부는 갖가지 폐단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근간이 뒤흔들릴 만큼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복원과 분배정책의 핵심을 조세 수취 체제의 개혁에서 찾은 김육의 판단은 정확했다.

당시 농민들은 조세 부담을 못 이겨 집과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거나 도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백성을 빈곤하게 만든 반면 일부 대토지 소유자나 부농, 지주 그리고 부패 관료와 상인만을 부유하게 하는 '부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더욱이 공납제 덕분에 일부 부유층은 가난한 백성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해 재산을 더 많이 불려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조선의 국가 경제를 뒤흔들고 왕실 및 관청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다.

김육은 조세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정책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김육의 사상과 대동법의 관련성은 그가 효종이 즉위한 해(1649)에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청한 상소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먼저 백성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을 살찌우고 권력 있는 세도가를 섬기는 일에만 충실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방의 세력가와 부자들이 제멋대로 토지 소유를 늘리기 때문이며, 셋째는 사신 행차가 많아 대접하고 물품을 조달하느라 백성이 곤궁해진다는 것이다. 탐관오리, 권세가, 토호, 부자, 사신들은 나날이 부유해지는 반면에 백성은 날이 갈수록 곤궁해질 뿐이라는 지적이었다.

김육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을 '대동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소문에서 그는 대동법이 부역과 조세를 균등하게 해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실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란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의 소원에 따라 입안하고 집행해야 마땅하며 부호들이 대동법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뜻을 좇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김육은 정책의 초점을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다수의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분배론자'의 입장을 확실히 취했다.

안민익국(安民益國), 선 민생 후 부국론

현재에도 성장론자들은 1인당 국민소득, 연간 수출량, 경제 성장률, 종합주가지수 등 '국가' 차원의 경제 지표를 중시한다. 반면에 분배론자들은 도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나 도시, 농촌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에 더 관심을 둔다. 즉 국가 차원의 경제 지표가 성장론자들의 관심사라면, 국민(개인) 차원의 경제 지표는 분배론자들의 관심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육은 성장론자보다 분배론자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현재의 분배론자들처럼 '국가'보다는 '백성(개인)의 삶'을 더 우선시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에 이롭다'라는 안민익국론(安民益國論)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안민익국론을

요즘식 표현으로 풀어 본다면 '선(先) 민생 후(後) 부국' 또는 '선 분배 후 성장'론이다.

그는 백성이 바라는 것은 하늘도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임금은 백성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도와 전라도 백성 수백만이 원하는 대동법을 단지 50여 명에 불과한 지방 수령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훌륭한 임금은 국가에 이롭지만 백성에게는 해로운 정책을 결코 강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곧 국가나 관청의 이익과 백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경우 백성의 뜻을 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백성이 고르게 잘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백성이 일정한 거처를 두고 생업에 전념할 의욕을 갖지 못한다면, 그 원망이 하늘과 같은 큰 힘을 지녀 나라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백성의 삶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육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가 그토록 끈질기고 집요하게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이유 역시 먼저 백성의 삶이 안정되고 나라에 대한 원망이 없어져야 나라의 재정과 경제 또한 부유해지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동법 이외에도 김육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는 화폐의 유통 역시 김육에게서 비롯되었다. 《만기요람》에서는 효종 2년(1651)에 정승 자리에 오른 김육이 지방 수령들로부터 구리와 철을 모아 화폐를 주조한 것이 우리나라 화폐의 시초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그 후 100여 년을 내려오면서 '화폐 혁파 여부'를 두고 여러 번 조정 내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없애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육은 화폐 유통의 첫 관문을 열었고 숙종 4년(1678)에 국가 화폐인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는 데 주춧돌이 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상품`-`화폐 경제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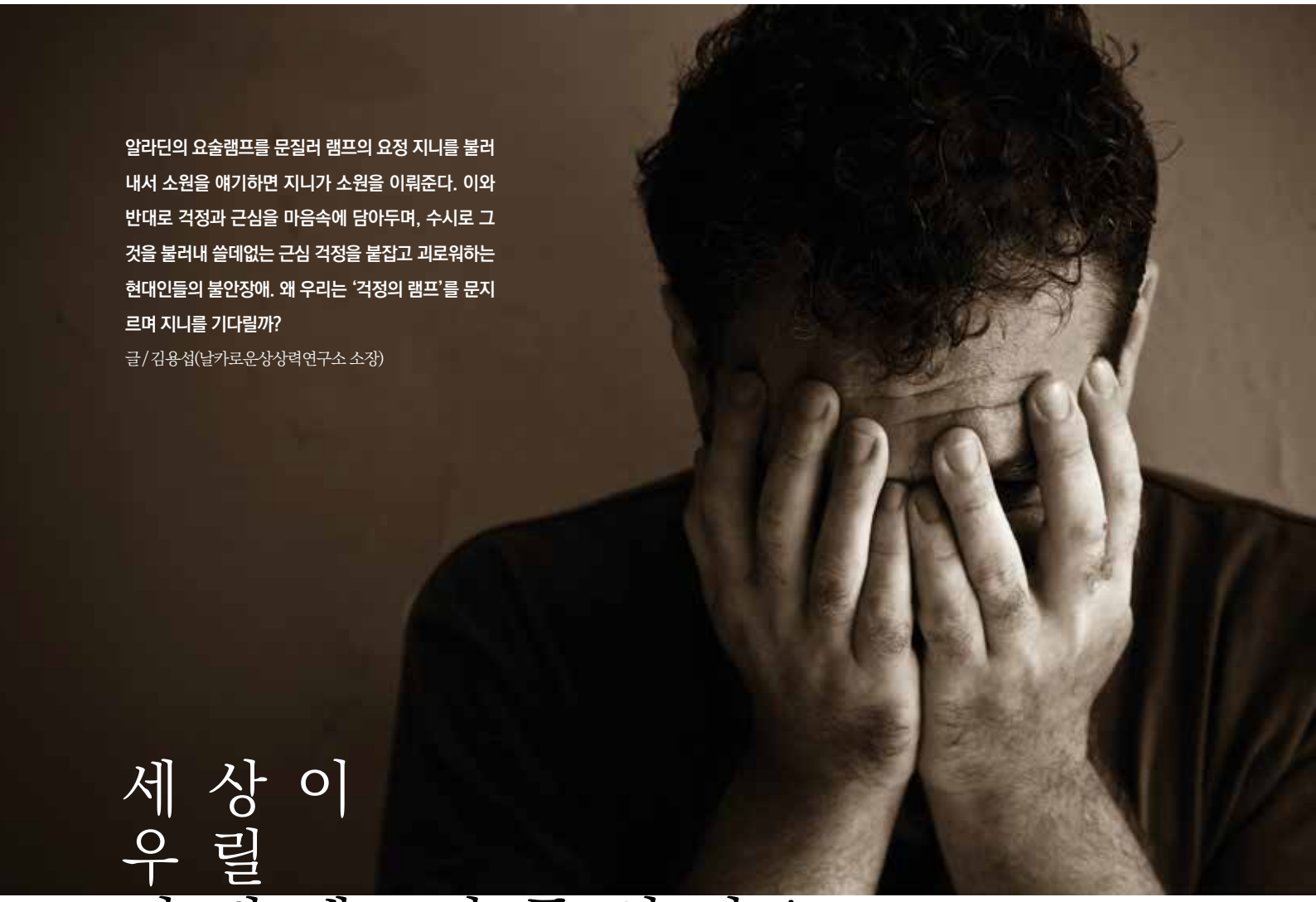
이외에도 김육은 상업 발달을 촉진하는 수레 사용과 도로 확장 및 개선을 주장했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차 제조와 보급에도 힘썼다.

김육 사상의 계승자들

김육의 사상은 18세기 상공업 발달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을 역설한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북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김육은 평생 동안 오로지 수레와 화폐 사용 두 가지 시책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썼다"라고 적은 대목은 북학파 실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김육을 '북학파의 원조 또는 선구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김육은 근대적인 상품-화폐 및 시장 경제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17세기 조선 사회에 거대한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이다. 경제 개혁과 상공업 및 시장 경제의 장려를 주창한 후대 실학자들의 대부분은 현실 정치나 정책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최고 관료의 신분으로 자신의 개혁 사상을 현실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했다. 조선사 속 인물을 샅샅이 뒤져 보아도 김육처럼 사상과 실천이 일치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김육은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 관료 또는 관료 경제학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18세기 조선경제학자들의 부국론)
저자 한정주 지음
출판사 다당초당(다산북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질러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서 소원을 얘기하면 지니가 소원을 이뤄준다. 이와 반대로 걱정과 근심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수시로 그것을 불러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의 불안장애. 왜 우리는 '걱정의 램프'를 문지르며 지니를 기다릴까?

글/김용섭(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세상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다!

불안이 가중된 과잉근심사회와 '램프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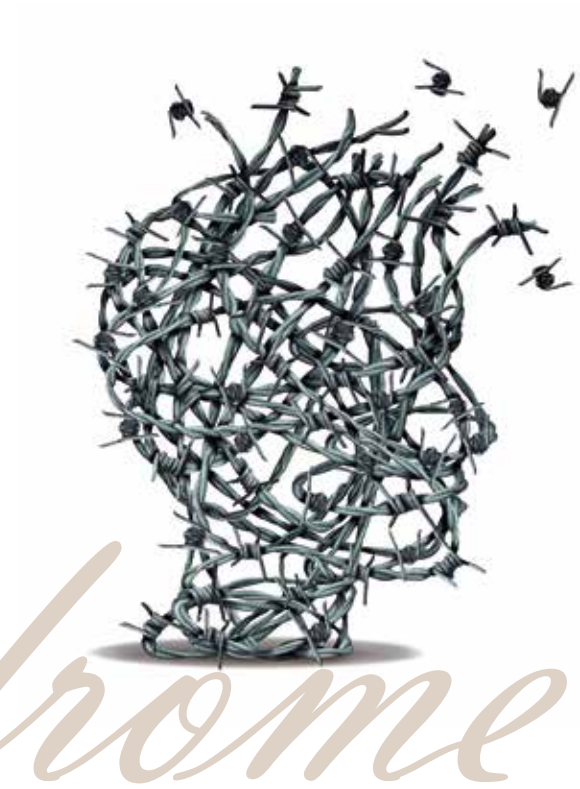
Lamp Syna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조지 월튼(George L Walton) 박사는 〈Why Worry〉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아울러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오로지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즉 96%의 걱정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얘기다. 그만큼 우린 걱정을 과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램프증후군에 빠진 현대인들

과잉근심 현상을 일컫는 램프증후군(Lamp Syndrome)이란 용어가 있다. 알라딘 마술램프에서 램프 속 마법의 거인 지니를 불러내듯, 수시로 걱정을 끄집어내서 걱정을 사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없는 걱정도 끄집어내면 순식간에 증폭되며 마치 엄청난 걱정인 양 여겨질 수도 있고, 그 걱정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점점 불안감과 위기감만 증폭된다.

사실 현대인들이 과잉근심에 빠진 건 이유가 있긴 하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세대란, 월세폭등 등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절벽, 기업의 구조조정 확대라는 현실에서의 고용 불안, 빈곤 노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노후불안, 여기에 장기 불황의 시대까지 더하며 우릴 더 불안하게 만든다. 사회안전망도 미약하고 각종 범죄는 여전히 많고 청년실업을 비롯해 전 연령대가 고용불안에 빠졌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비롯해 각종 환경 문제도 크고 GMO나 각종 불량식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과거보다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걱정을 달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린 지금 불안한 세상에서 산다.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나만 잘 살면 되는 걸까?

불안한 세상에서 걱정을 달고 사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자기만 챙기는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이럴 순 없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쓸데없는 과잉근심 대신 좀 더 생산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도 크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기심이다.

우린 너무 치열한 경쟁구도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을 쌓아왔다. 인생에 패자와 도태자들을 양산시켰고 그것이 우릴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도태자들의 묻지마 범죄나 증오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오로지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 우린 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든다. 하지만 장기불황이자 경제위기는 이마저도 힘들게 했다. 고성장의 시대에선 이기는 게 전부였어도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갈 공생의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회는 더 불안해진다. 결국 복지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기도 하다. 복지강국 북유럽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건, 우리가 가진 경제적 불안감이자 그로 인한 삶에 대한 전반적 불안 때문이다. 결국 과잉근심사회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사회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자 불안감이 개개인을 더더욱 과잉근심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이다.

사회적 도태자들의 묻지마 범죄나 증오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오로지 믿을 건 돈 밖에 없다는 생각에 우린 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든다. 하지만 장기불황이자 경제위기는 이마저도 힘들게 했다.

과잉근심사회는 다양한 기회와 새로운 욕구를 낳는다

불안이 커지고 위안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종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 종교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 종교산업이 호황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종교 산업은 호황이 아니다. 대신 위안을 '작은 사치'와 같은 소비를 통해서 찾거나, 소셜네트워크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서 찾는다. 종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위안 산업의 역할을 명상과 힐링, 상담 등이 대신하고 있다. 이젠 정신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카운셀링 산업도 커져간다. 미래와 현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상담받고 조언받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명상, 힐링 상품도 확대되고 요가를 비롯해 신체와 정신을 함께 수양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심지어 운세나 점술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장난감에 열광하는 3040 키덜트족과 캠핑족 증가와도 연결된다. 취미에 투자하고 일상의 즐거움에 열광하는 이들의 증가는 분명 불안하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름의 위안방법이기 때문이다.

위안은 안전 서비스에서도 찾는다.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줄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도 더 찾을 수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으로서는 기회가 더 많아진 셈이다. 우리에겐 마음의 위안뿐 아니라 신체적 위안을 위한 상품도 더 필요해진다. 복고도 위안을 준다. 과거의 향수와 추억은 현실의 팍팍함을 잠시 잊게 해준다. 90년대 가수들을 소환하고 과거의 먹거리와 문화도 되살린다. 우린 복고를 전방위로 받

아들인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기라도 하듯 말이다. 결국 위안이다.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과거로의 순간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행 속에서 과잉근심사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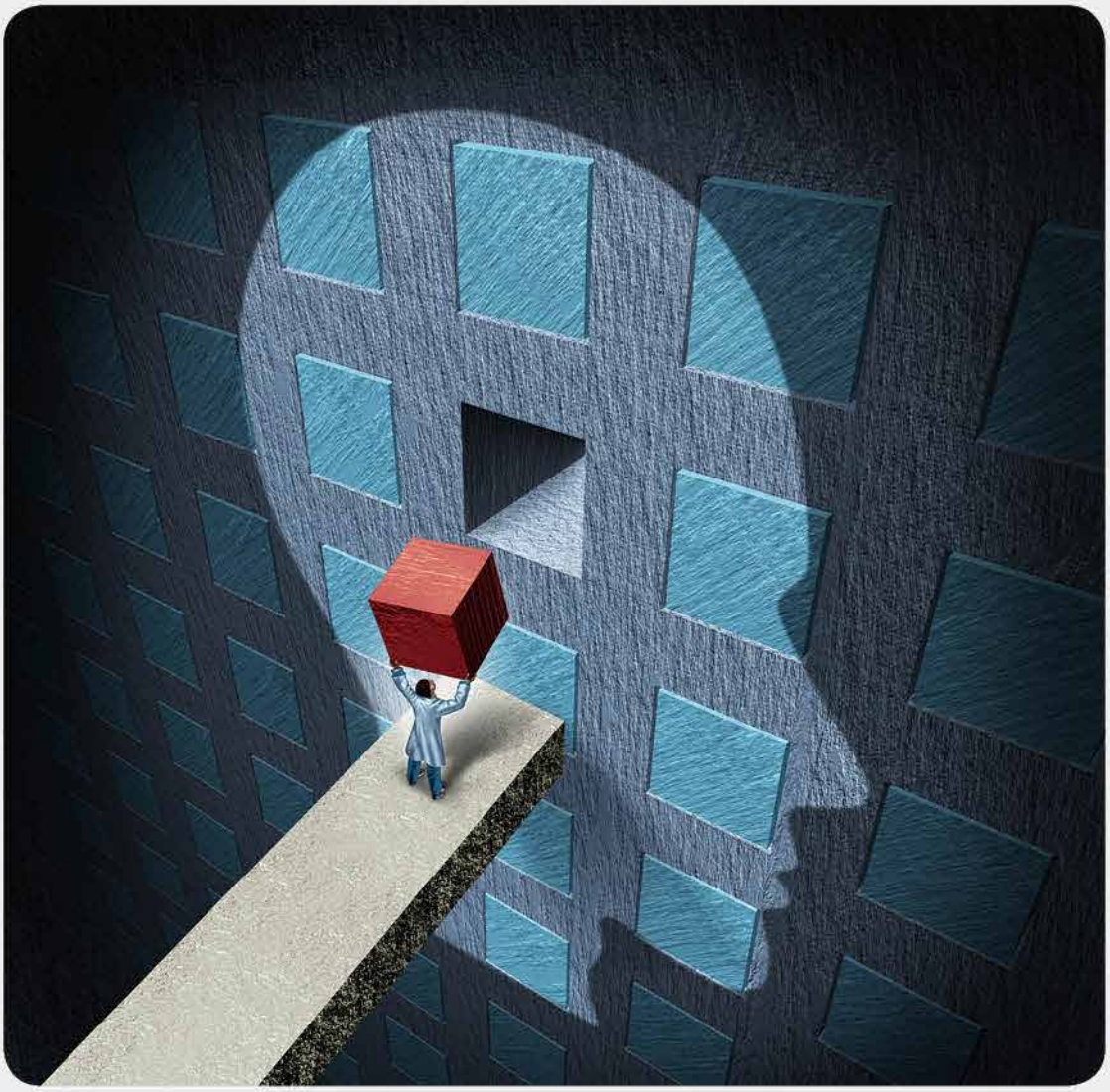
작년과 올해 출판가의 히트 상품 중 하나가 컬러링북과 필사책이다. 색칠하기를 통해 자기만의 몰입과 집중 속에서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명문장을 따라 필사를 하는 것도 힐링이자 스트레스 해소다. 이런 유행 속에서 만년필과 손글씨 쓰기도 인기를 얻었고 컬러링북 덕분에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진 성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이 불안의 시대의 현상들이다. 복잡한 걸 읽기보단 잠시 잠깐 아무 생각없이 집중할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출판가까지 이어졌으니 말이다. 색칠하거나 필사하다가 잠시 멈춰도 되고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된다. 잠시 틈이 났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하기 좋은 것이다. 불안한 시대 복잡한 머릿속을 달래는 선택이었던 셈이다.

요즘 한국에서 심플라이프, 즉 단순하게 살기가 유행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늘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소비가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소비의 사회를 살아왔던 건, 새로운 물건이 주는 편리와 풍요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갖고 있던 물건을 줄여 오히려 일상의 풍요를 누린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물건이자 욕망을 줄이고 가족이자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열풍처럼 확산된 킨포크 트렌드이자 도시농부가 되겠다는 시티팜 트렌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단샤리(斷捨離)' 열풍도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건 한국에서 심플라이프를 지향하거나, 심플라이프에 관심을 둔 이들 중에 40대 이상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소비와 풍요를 가장 많이 누려봤던 이들이 오히려 그걸 가장 먼저 버리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삶의 태도가 단순해진다는 것은 잘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과잉근심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우린 이미 잘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세상이 안 바뀌면 우리의 일상이자 삶의 태도라도 바꿔야 하니까.

김용섭 소장은…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며, 저서로는 〈라이프트렌드 2016 : 그들의 은밀한 취향〉, 〈라이프트렌드 2015 : 가면을 쓴 사람들〉, 〈라이프트렌드 2014 : 그녀의 작은 사치〉, 〈완벽한 싱글〉, 〈라이프 트렌드 2013 : 좀 놀아본 오빠들의 귀환〉, 〈트렌드 히치하이킹〉, 〈소비자가 진화한다〉 등이 있다.



나는 타인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을까?

타인과 상황 판단 시 인지적 오류들

과연 우리는 '감히' 타인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할 위치에 서있는가?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인간이란 존재는 남을 평가하는 행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그나마' 옳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글 / 이윤형(영남대 심리학과 교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엄청난 정보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하지만 사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제한된 인지능력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선택하고 처리한다. 즉,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무시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perception)을 거치게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와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모두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지와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기에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 도식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누적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틀을 조직해 나간다. 이것이 도식인데 사람에 대한 도식, 역할도식, 특정 집단에 대한 도식에 이르기까지 도식은 여러 종류를 지닌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도식은 역할에 대한 도식이다. 즉 사람들은 '어머니', '교사', '여자(남자)친구'와 같은 역할과 관련되어 일정한 틀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대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도식을 가지는데 OOO부장님, XXX대리님과 같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갖는 나의 생각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도식이 존재한다.

도식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고를 덜어 보다 쉽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고정관념(stereotypes)과 같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화 '금발이 너무해'의 주인공 엘 우즈를 떠올려보자. 법

조계라는 아주 근엄하고 너무나 무채색일 것 같은 공간에서 그녀는 금발의 미녀에게 갖는 수많은 고정관념들(그것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직업 등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마침 여행용 가방이 망가져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가방 전문점에 들어가서 가방을 보려 하는데(나름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직원이 나를 보자마자 가장 싼 가방들은 저기에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어서(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했다!) 머쓱해서 나온 적이 있다. 해변에서 막 돌아오는 후줄근한 복장이 문제였으리라.

특히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개인을 판단하는데 별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가가 사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유사성이 더 많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지능력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또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라는 생각은 남들도 다 그러니까 굳이 내 행동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또 뛰어난 외모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연기력이 가려져 마음고생을 했었다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의 인터뷰는 사실 외모가 뛰어난 연기자는 연기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연기력이 좋다는 것을 은연 중에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도식 이외에도 다양한 인지적 오류들이 내가 타인이나 특정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은 나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내 기대가 맞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오류인데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나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중립적인 정보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가볍고 덤벙대는 친구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주변의 지인을 한 번 떠올려보자. 그 친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들어 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빠뜨렸다면 "네가 그럼 그렇지!"하고 무릎을 칠지도 모른다.

● 귀인

나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되짚는 과정을 귀인(attribution)이라고 한다. 물론 "저 친구가 분명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왜 못 본 척하지?" 하고 의식적으로 곰곰이 탐색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든 행동을 다 귀인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의외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고통스러운 사건일 경우에 주로 귀인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귀인행동은 다양한 형태의 편향(bias)을 통해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 **근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특성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를 보고 '평소 뭉그적대는 녀석, 시간 개념이 없군'하며 그의 성향으로 판단해버리고 교통사고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었다던가 하는 상황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 **행위자 관찰자 편향** (actor-observer effect)

근본적 귀인 오류에서 좀 더 확장된 편향이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상황이 그래서라는 상황 귀인)가 있기 때문이지만, 네가 잘못하는 건 네가 인간(성향 귀인)이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해버린다. 예를 들면, 상대편 차가 끼어들기를 하면 상대의 급한 성격과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이지만 내가 끼어들기 하는 것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자기중심적 편향** (self-centered bias)

자기중심적 편향은 함께 관여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 투자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지는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타인의 노력보다 내 노력을 회상해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이건 과제이건 주변 사람이든 항상 투덜대는 투덜이 스머프 같은 사람은 밉상 딱지를 떼기 어렵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항상 자신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자기보다 나은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면 분명 더 잘했을 거라고 확신하여 말한다. 또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친 이유는 교수가 문제를 굉장히 쪼잔하게 내서 그렇고,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으며 리포트는 의미도 없는 주제를 다

루어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일부러 대충 썼다는 식이다. 자기 일을 혼자 처리할 때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는 일도 그런 식이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 **자기 위주 편향**(self-serving bias)

옛 말에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다. 자기 위주 편향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편향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내부 귀인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다.

자기 위주 편향은 동기 이론의 입장에서는 자신(self)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된다. 인지 이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은 잘될 것으로 예측하지 실패할 것으로 미리 예측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내부 귀인하고 실패는 예상 밖의 일로 여기므로 외부 귀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Seidel 등은 뇌영상(fMRI)을 통하여 자기 위주 편향의 뇌 기제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자기 위주 편향은 보상에 관여하는 뇌 회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 위주 편향은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존감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모든 일에 다 내 탓을 하게 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리라. 하지만 모든 일을 상황 탓을 하게 되면 발전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적절히 자기 위주 편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본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인간은 일정한 인풋(input)에 따른 아웃풋(output)을 도출해 내는 컴퓨터가 아니다. 아무리 타인이나 상황을 공정하게 보고자 해도 나도 모르게 특정 정보만 취사선택하게 되고 나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공고해진 나만의 틀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본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알자.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판단이 잘못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 내가 그 친구를 잘못 평가했어"하고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이다.

남원의 러브 스토리를 만나다

바야흐로 봄, 형형색색의 꽃들이 망울을 터트리고, 이 아름다운 자태를 고이 담고자 나들이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봄나들이하면 누구나 '꽃놀이'를 연상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의 계절'이다.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사랑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멸의 고전 〈춘향전〉을 떠올린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러브스토리 배경지는 남원. 그곳에 '춘향이'도 울고 갈 한국판 '사랑과 영혼' 「만복사저포기」라는 가슴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아이돌 가수의 유행가처럼 '봄 사랑 벚꽃 말고' 이번 봄엔 옛 절터의 온기와 봄날의 정취를 찾아 남원으로 가보자.

글/편집부 사진제공/남원시

춘향의 고향 남원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춘향과 몽룡. 실제로 남원에는 춘향의 사연으로 얽힌 곳이 많다. 남원으로 들어서는 국도변에는 한양으로 떠나는 이몽룡과의 이별이 담긴 오리정, 춘향의 눈물이 떨어져 생겼다는 눈물방죽, 춘향이 버선발로 돌을 비볐다는 박석터, 이몽룡을 떠나보내고 춘향이가 버선을 던져 생겼다는 버선밭, 구룡계곡 입구 육모정 앞의 춘향이 묘, 춘향을 주제로 한 춘향테마파크 등 다양하다. 여기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뤄졌던 광한루원은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곳.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광한루원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해낸 공간으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이다.

하늘나라 월궁을 광한루라 하였고, 그 아래 천상의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놓았으며,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속의 삼신산을 연못 가운데 조성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천체우주를 상징한다. 이외에도 완월정, 춘향사당, 춘향관, 월매집, 그네, 전통놀이 체험장 등 오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1, 2. 매년 5월 남원에서는 사랑의 축제 한마당 〈춘향제〉가 열린다.
3. 〈춘향전〉을 주제로 조성한 관광단지로 만남맹약사랑과 이별시련 축제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사랑의 축제 한마당 〈춘향제〉

한국문학의 백미 《춘향전》의 발상지 남원 땅은 매년 5월, '사랑의 도시'가 된다. 열녀춘향의 얼을 기리고, 정절과 사랑을 모태로 한 춘향제는 전국 1천 5백여 개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축제다.

18세기 춘향이 살던 조선 숙종시대의 연애상과 생활상을 재현하고 형틀과 가마 체험, 대동 길놀이, 춘향 그네체험, 방자 체험마당, 삽다리 체험 등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의 주 무대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공간, 광한루원이다. 이곳의 수중누각 완월정에서는 춘향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국 춘향선발대회가 열린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백년가약을 다짐한 월매집 부용당 사랑채에 내걸린 '사랑의 맹세판' 앞은 오작교를 건너며 약속한 사랑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연인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광한루원

문 의 처 : 063-620-8901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천거동)
이용시간 : 08:00~20:00
쉬 는 날 : 무휴
입 장 료 : 성인 2,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홈페이지 : www.gwanghallu.or.kr

제 86회 춘향제

일 정 : 2016년 5월 13일(금) ~ 5월 16일(월) / 4일간
장 소 : 광한루원, 요천일원 등
주 제 :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
주 최 : 남원시 | 춘향문화선양회
주 관 :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민속국악원 | JTV전주방송

애절한 사랑이 담긴 만복사지

사랑의 도시 남원에는 두 개의 러브스토리가 있다. 하나가 〈춘향전〉이라면 다른 하나는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속 「만복사저포기」이다.

남원 고을에 외로이 살던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와 윷놀이와 비슷한 옛 놀이 '저포'를 하여 이기고, 소원이던 아름다운 배필을 만난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잣집 딸이 죽어 현신한 영혼이다.

배꽃 만발한 봄날, 만복사에서 만난 영혼과 사랑을 나누고 부부의 연을 맺은 이 절절한 사랑이야기는 '만복사지'가 배경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배경지이자 고려 문종 때 창건 당시 승려가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사찰이었지만, 정유재란 당시 화재로 무너져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남원의 8경 중 만복사 '귀승'이 있는데, 시주를 마치고 저녁나절에 만복사로 돌아오는 승려들의 행렬이 실로 장관을 이루었다는 것에서 비롯돼 아름다운 경치로 꼽았다고 한다.

전각은 모두 불타고 지금은 오층석탑(보물 30호), 석조대좌(보물 31호), 당간지주(보물 32호), 석조여래입상(보물 43호), 석인상, 주춧돌 등만 남았다. 아담한 전각을 복원해 그 내부에 모신 석조여래입상은 높이 2m 불상이다. 코와 손이 떨어져 나갔지만,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옷자락과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완만한 윤곽선 등이 조금은 촌스럽지만 친근한 인상이다. 불상 뒷면에 선으로 새긴 여래입상이 있으니 꼭 챙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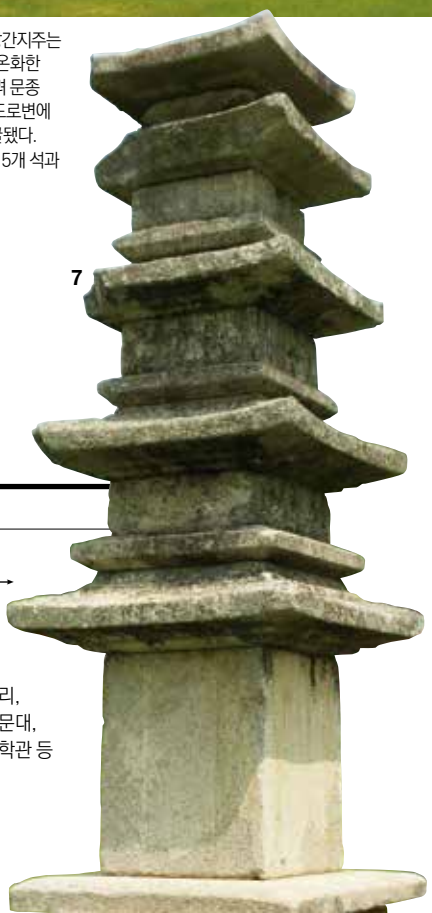
만복사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석인상이다. 키 3.7m에 다부진 체격, 꽉 다문 입술이 특징인 석인상은 절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당 깃발을 멘 장대를 지탱하던 당간지주다. 만복사지 옆 도로변에 머리 부분을 노출한 채 땅에 묻힌 것을 2009년 절터 안으로 옮기고, 원래 키를 되찾아줬다. 당간지주는 두 개가 세트인데 만복사지에 석인상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춘향테마파크 내 남원향토박물관에 머리만 전시하고 있다.

4

5

6

4. 보물 제32호로 지정된 만복사지 당간지주는 두 지주가 동서로 마주 보고 있다. **5.** 온화한 인상의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은 고려 문종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 **6.** 석인상은 도로변에 머리만 노출돼 있다가 2009년에 발굴됐다. **7.** 보물 제30호 만복사지 오층석탑은 5개 석과 상층 탑신 사이 별석이 특징이다.


7

Travel Information

명소 탐방
남원 만복사지 → 춘향테마파크 → 광한루원 → 남원추어탕거리 → 국악의 성지

주변 볼거리
광한루원, 실상사, 지리산허브밸리, 육모정, 뱀사골,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만인의총, 남원교룡산성, 혼불문학관 등

가장 달콤한 독 '설탕' 섭취량부터 확 줄여라!

설탕은 설탕에 함유된 도파민 성분을 활발하도록 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이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 점차 설탕으로 충족되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흡수가 되지 않은 나머지 당분들은 모두 지방으로 변하므로 비만이 될 수 있다. 또한 요산 증가로 인하여 고혈압이나 뇌졸증, 심장병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설탕 중독이 왜 위험하고, 설탕 중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편집부

'어떤' 당을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7일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커피와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하루 섭취 열량 중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류 비율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원인인 당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에서다. 원인은 각각이지만 전 세계 3억 5,000만명 정도가 당뇨에 시달리고, 국내 당뇨병 환자만 해도 약 400만명에 이른다.

2013년도 기준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 가공식품 당류 섭

취량은 44.7g(8.9%)으로 WHO의 기준 아래이지만 2010년 7.6%, 2011년 7.7%, 2012년 8.1%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과일과 곡식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천연당'이 아닌 가공식품에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첨가당'을 문제삼았다. 당 자체보다 '어떤' 당을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당은 인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기능을 한다. 뇌, 신경조직 등과 같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인체조직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주로 이 당을 빵, 과자, 청량음료 등에 포함된 '나쁜 단맛'으로부터 충족했다. 이런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습관적인 군것질 섭취로 인한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달콤함, 설탕의 두 얼굴

설탕은 넓은 의미로 포도당·과당·맥아당·유당·갈락토스 등과 같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사탕수수, 사탕무 등 즙을 정제한 수크로스를 지칭하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설탕이다.

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자주 사용된다. 설탕 특유의 단맛과 더불어 혈중 포도당 수치를 쉽게 높일 수 있어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내분비계가 교란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남은 양은 글리코겐(glycogen)으로 변환돼 체내에 축적되거나 다른 장기의 활동을 방해한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성인병에도 문제가 된다. 또한,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에 남은 잔여물이 포식세포 수치를 낮춰 몸을 산성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설탕의 당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높이는데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급속도로 떨어뜨린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내분비계가 교란되며, 이는 갑상샘 이상, 부신 고갈로 인한 만성피로, 저혈당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이 주는 강렬하고도 달콤한 자극이 계속된 설탕의 섭취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설탕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져다주는 것과 유사한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 몸은 이 같은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자 설탕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슈가 블루스(Sugar Blues, 설탕에 함유된 정제 수크로스의 과다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복합질환을 일컫는 말)라고 하는데, 일례로 슈가 블루스란 단어를 유행시킨 뉴욕포스트 기자인 윌리엄 더프티(William Dufty)는 설탕을 니코틴이나 헤로인 이상의 중독성을 가진 살인물질로 고발했다고 한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가 규정한 일일 권장 당분 섭취량은 50g이며, 이는 각설탕 15개 정도의 분량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국제기준을 웃도는 60g을 섭취하고 있으며 어린이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g을 섭취한다고 한다. 하지만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주 경로는 뜻밖에도 설탕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에서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설탕을 먹게 되는 것 같다.

음식을 통해 설탕의 섭취량이 늘어나다 보니, 설탕으로 인한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만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이며 비만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에서 비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5.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멕시코, 영국,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OECD 평균 17.8%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하지만,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에 간과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설탕 대신 먹는 '착한 단맛'은 무엇일까

자극적인 단맛에 익숙한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설탕은 적은 재료, 짧은 조리 시간 내 '맛있게' 먹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당 섭취가 과다한 식사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출근길 양 손에 커피와 도넛을 들고 가며 한 끼를 때우는 모습은 열심히 사는 직장인의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영양분이 아닌 '시간'에 초점을 맞춘 삶이지만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당 함량이 적은 식품을 택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 김은미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에 따르면 성인 소비자 238명 중 '당류 저감화 식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64.3%(15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2.7%(54명)에 불과했다. 당류 저감화 식품을 구입한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가 42.9%(63명)로 나타났고, '체중조절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27.9%(41명)였다. 반면 당 함량을 줄인 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단맛이 입에 맞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5.8%(19명)였다.

설탕 중독 악순환의 연속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나쁜 단맛'을 대체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잼 바른 토스트, 달콤한 시리얼 대신 데친 브로콜리에 살짝 소금을 친 삶은 달걀, 스틱형태로 자른 당근, 오이, 파프리카 등이 바쁜 출근길 식사 대용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생과일 주스 등 과즙만 먹는 것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께 먹을 수 있어 건강에 이롭다. 짜장면, 피자, 떡볶이 등 야식으로 즐겨 먹는 배달음식을 줄이는 것도 과도한 당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달콤한 간식이 당긴다면 비스킷이나 초콜릿보다 아보카도, 버터, 올리브 오일, 견과류, 달걀, 치즈, 해산물 등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대신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당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는 포만감과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뇌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다.

그래도 설탕을 대신할 단맛이 필요하다면 아스파탐, 사카린, 알룰로스, 스테비아와 같은 대체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 같은 대체 감미료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알룰로스의 경우 설탕의 70% 수준의 단맛을 내는 반면 열량은 거의 없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11가지 방법

1.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 확인 초콜릿, 케이크, 콜라뿐만이 아니다. 시리얼, 요구르트, 그래놀라바, 케첩,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심지어 술에도 설탕이 들어있다. 제품 뒷면의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2. 작은 변화부터 시작 처음부터 완벽히 끊으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음료부터 시작할 것.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차, 커피, 주스 등을 마실 때 설탕이 없는 것을 골라라.

3. 아침 식사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적정히 유지된다.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이다. 오트(귀리)와 계란 몇 개가 이상적인 아침 식사다.

4. 금주 술에는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있을 뿐더러 설탕이 든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 밤새 술을 마신 다음 날 달고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이 먹고 싶은 건 이 때문이다.

5.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앤다. 혈당 수치도 조절해줘 낮 동안엔 활력을 느끼게 하고, 밤에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해지는 건 덤이다.

6. 건강한 간식 설탕을 끊는 것이 간식을 끊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야채, 과일, 리코타 치즈, 견과류 등 건강한 간식을 먹어라.

7. 비타민 비타민B, 비타민C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든다. 힘이 달려 당분을 섭취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8. 설탕의 다른 이름 알기 과당, 옥수수 시럽, 자당 등. 모두 설탕의 다른 이름이다. 조사 결과 설탕은 음식에 따라 61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9. 진정한 보상을 위해 남겨두기 평소 참았던 설탕 섭취는 가치 있는 때에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 정말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다. 수프, 드레싱, 요구르트, 시리얼 등은 굳이 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

10. 무가당 제품 구매 설탕 대신 바닐라, 계피, 레몬, 라임 등을 첨가한 음식을 먹자. 맛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11. 버텨라 초반엔 설탕 끊기가 불가능한 시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드레싱 만드는 것을 배우고, 대체할 만한 음식을 찾아가면며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설탕을 먹지 않은 덕에 자연적인 당분의 맛이 인공적인 단맛보다 훨씬 나은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설탕에 대한 갈망도 줄어든다.

눈도 호강하고, 입도 호강하는 우엉 잡채

우엉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뿌리채소다.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 신장기능을 높여주고, 섬유소질 역시 많이 함유하고 있어
움직임이 적은 겨울철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할 만하다.
특히 잡채에 이용하면 다양한 빛깔의 채소와 어우러져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글사진/손유진(푸드 칼럼니스트, 더디쉬 www.thedish.co.kr)

제철이라 맛도 영양도 좋은 우엉

뿌리채소들은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 뿌리채소 중 우엉은 '제철이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다. 특히 추운 겨울은 제철이라 더욱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다. 풍부한 섬유질 덕에 배변을 촉진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우엉은 리그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하다. 이 성분은 항균작용을 하며, 암과 동맥경화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너무 굵은 우엉은 중국산일 경우가 많으므로 적당한 두께의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바람이 들지 않고 건조하지 않은 것, 껍질에 흠이 없고 매끈한 것, 수염뿌리나 혹이 없는 것, 잘랐을 때 부드러운 것이 좋은 우엉이라고 하니 구매할 때 참고하면 좋다.

한상차림으로 부족함 없는 우엉 잡채

우엉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뿌리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요리는 흔하지 않다. 이번에 소개할 우엉 잡채는 일반 잡채보다 만들기도 쉽고, 우엉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요리다. 씹히는 식감도 적당히 꼬들거리면서 다른 채소가 함께 들어가 우엉조림보다 짠기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다. 담음새가 예뻐서 한상차림에도 제격이다.

건조해지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므로 보관할 때는 건조하지 않도록 0~5℃에서 보관하고, 소량의 경우는 이틀 정도 햇볕에 말렸다가 신문지에 싸서 두면 좋다.

우엉의 손질은 생각보다 간편하다. 필러를 활용해 겉껍질을 제거하면 너무 버리는 양이 많아지므로 칼등으로 살살 긁어내거나 솔로 문질러 씻으면 겉껍질을 얇게 제거할 수 있다. 겉껍질을 제거한 우엉은 연한 식초 물에 담가 두면 색도 하얗게 유지할 수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지니 조리 시 참고하면 좋다.

Food Recipe

우엉 잡채 레시피

재료(2인 분량) 우엉 중간크기 1대, 청피망 1/2개, 홍피망 1/2개, 양파 1/2개, 식용유 약간
* **우엉 삶기** 식초 1큰술
* **조림장** 진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청주 1큰술, 맛술 1큰술, 물엿 1작은술, 물 1컵
* **잡채 양념** 참기름 1/2큰술, 통깨 1큰술, 생강즙 약간

1.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껍질을 벗겨 채 썬 우엉을 데친 후 찬물에 헹군다.
2. 냄비에 조림장 재료를 담고, ①의 우엉을 넣어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조린다.
3. 식용유를 두른 팬에 채 썬 청·홍피망과 양파를 넣고, 소금을 약간 뿌려 볶은 후 식힌다.
4. 볼에 조린 우엉과 볶은 채소를 넣고, 잡채 양념을 섞어 완성한다.

Tip. 우엉 잡채 요리 시 참고하세요
우엉은 조리기 전에 식초 물에 살짝 데친 후 다시 조림장을 넣고 끓여야 색도 좋고 맛도 떫지 않아요.
우엉을 데친 후에는 찬물에서 헹궈내야 시큼한 맛이 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재테크보다 '빚테크'… 신용등급 올리는 '신용관리 방안'

연체기간 길고 규모 큰 채무부터 먼저 갚아야 유리

현대사회는 신용만으로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신용사회'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신용관리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글/조은국 기자(디지털타임스)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빚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에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될 것입니다. 돈을 빌린 대가로 낼 수밖에 없는 이자라면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봉·직장 등 조건 같아도 신용등급 따라 금리 격차 커져

같은 직장에 연봉 수준이 같은 두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린다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같을까요? 두 사람의 신용등급이 큰 격차를 보인다면 이자 차이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10% 후반대의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함께 1억원을 빌렸어도 은행에서 일반신용대출로 돈을 빌렸을 경우 3월 기준 평균금리가 대략 5%대이기 때문에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는 500만원, 매달 41만원가량 납부하면 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20%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연 이자만 2,000만원, 매달 167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봉, 직장 등 조건이 비슷해도 신용등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처럼 눈먼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금융이용자들이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할 때는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용등급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합니

다.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기초는 새는 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부터 막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용등급 최대 적은 '연체'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CB) 및 금융사가 연체정보와 대출·보증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를 종합해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고 7~10등급을 저신용자로 분류합니다. 금융사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융거래 가능 여부와 금리 등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금융거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신용등급 하락의 최대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체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혹 신용카드 대금을 며칠 연체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연체정보가 타 금융사와 공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신용등급 자체도 하락하지만 타 금융사와의 금융거래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체정보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연체의 종류에는 대출 원리금 연체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 세금과 각종 과태료 연체, 공과금 및 휴대폰 사용료 연체 등이 있습니다. 내야 하는 돈이 소액일지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빚이 너무 많아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채무는 연체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체가 길고 규모가 큰 순서대로 상환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용등급의 최대의 적이 연체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했고,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연체기간이 긴 채무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다중 채무 중 연체 기간이 같다면 채무 규모가 큰 것부터 갚아나가야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집니다. 빚의 규모가 작아야 신용개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 한 곳으로 모으고,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갚아 상환비율을 높이는 것이 신용등급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 쉽게 놓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휴대폰 사용료, 공과금 등은 납기일 전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할부 기능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 결제가 효과적입니다. 할부결제가 많아지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는 주로 사용하는 1~2개 카드만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많은 카드를 발급받으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매달 일정하게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사용 한도를 평소 사용하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야흐로 신록이 짙어지며 상쾌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봄이다. 이번 봄에는 바람을 가르며 자연의 상쾌함 속에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자전거를 타 보자. 자전거를 타면 느려진 속도만큼 풍경을 더욱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자전거로 즐긴다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풍경에 입체감을 더해 줄 수 있다. 자전거 타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전거만 갖추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없고 노약자,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여가를 함께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은 자전거에 몸을 싣고 푸른 녹음이 짙어진 도심 속으로 달려보자. 글/편집부

두 바퀴에 낭만 싣고 꽃길 달린다

달리는 즐거움 속 치유와 위로, 휴식의 봄나들이

무엇부터 배워야 하나?

사이클링은 전신운동으로 폐, 심장기능 근육 등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 주는 밀도 높은 운동이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은 다리에 몸 전체의 체중을 두어 힘을 가하기 때문에 하체의 힘이 길러지며 전신을 움직여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크다.

자전거는 전신운동 효과와 함께 스피드를 즐기는 운동으로 매일 타는 사람의 경우 30분~1시간 가량이 적당하다. 특히 퇴직 후 몸이 불어 자전거를 타면서 몸의 군살이 빠지고 지병인 신경통도 말끔히 가신다. 자전거는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고 배우기가 쉽다는 이점 때문이다. 자전거는 한 번 구입한 후, 부속품 교체와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탈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자전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차체가 가벼운 것으로 골라야 한다. 그래야 페달을 밟을 때 힘이 덜 가해져 오랫동안 탈 수 있다. 부품이 정밀한 것일수록 견고하다. 스피드를 내는 운동이라 고속질주에도 펑크가 잘 나지 않아야 한다. 크랭크가 견고해서 기어의 마모 및 이격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자전거는 비싼 것은 1백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하이킹용으로는 10만원~30만원 짜리가 적당하다.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고급품인데 일반 자전거는 10만원선이면 무난하다. 장거리 하이킹에 적당한 기어 달린 제품은 20만원~5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복장은 자유롭지만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스판덱스로 된 운동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화는 바닥이 딱딱한 것이 발바닥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 좋다.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 헬멧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안장에 앉아서 양발이 땅에 닿을 정도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표준높이는 기어에서 안장 밑에 연결된 파이프까지를 기준으로 키가 160인 경우 5백mm, 170는 5백30mm, 180 이상일 때는 5백50~6백mm이어야 무리 없이 탈 수 있다.

안장의 높이는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내리고 안장에 엉덩이가 수평이 된 상태로 앉아 페달에 발뒤꿈치가 닿은 상태에서 무릎이 20~30° 구부러진 정도가 적당하다. 안장은 넓은 것보다 좁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혈압환자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심장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혈압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하루 10분씩 타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동네를 벗어나 자전거 하이킹을 하려면 자전거 이외에도 헬멧, 유니폼, 장갑, 신발 등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서 배워야할까?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탈 경우 보통 4~6분에 1.6km 이상을 달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초보자는 시속 20km 정도로 20분을 달린 뒤 10분씩 쉬는 방식으로 체력안배를 하는 게 좋다.

자전거를 혼자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경우 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02-420-5430)로 연락하면 강습, 하이킹 코스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자전거를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호인 모임 등에서 강습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체육전국 자전거연합회(02-420-5430)를 주축으로 한 시도별 지부에서 실습하는 강습회를 활용해도 좋다. 서울시 공공자전거(www.bikeseoul.com)는 회원제와 비회원(1일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의 무인대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녹색자전거열차 운행 문의 및 참가예약 신청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관광개발(www.korailtravel.com)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열차는 일반객차 4량과 자전거 적재 객차 4량으로 이뤄져 있어, 자전거 마니아들이 기차여행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하이킹 드라이브 코스는 어디일까?

▲성북천 ▲성내천 ▲불광천 ▲양재천 ▲탄천 ▲안양천 ▲중랑천 등 한강 지류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지천 자전거여행 코스 7선'을 소개한다.

안양천

노천공연과 엑스게임 등 눈과 귀가 즐거운 자전거여행

안양천은 1호선 금천구청역~구일역~오목교~한강 · 안양천 합류부까지 13km, 약 65분의 중급 코스다. 안양천은 마치 양재천과 성내천을 섞어 놓은 듯, 지천폭이 넓어 탁 트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출발해 20분 정도 지나면 왼쪽으로 고척돔구장을 볼 수 있다.

불광천

해지기 전에 가볍게 다녀 올 수 있는 곳

응암역~월드컵경기장~망원한강공원 수영장까지 5.0km, 약 30분 코스다.
불광천은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지천 중의 하나다. '불광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는 자전거 대여소뿐만 아니라 수리소, 휴게실, 샤워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불광천 코스는 마니아들에게 자전거타기 좋기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양재천

높은 빌딩과 갈대숲 사이 자전거도로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3호선 학여울역~대치초등학교~강남수도사업소~양재 시민의 숲으로 이어지는 5.5km, 33분 코스다. 양재천은 보행로 아래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고층 빌딩이 우거진 갈대숲 사이로 난 자전거도로를 굽어보고
있는 풍경이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조화를 이룬다.

장거리 하이킹을 떠날 때 주의하세요

- 교통법규 미리 알고 필히 준수하기
- 도로변을 따라 달리므로 차선 꼭 지키기
- 열차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하차하여 끌고 건너기
- 야간에는 전조등을 부착하기
- 헬멧, 장갑, 사이클화, 사이클복 등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기
- 자전거 타기 전에 브레이크와 크랭크를 점검하는 습관 기르기

자전거 기본 작동 요령

- **브레이크 잡는 법과 조작요령** : 엄지손가락으로 핸들 손잡이를 감싸고 나머지 손가은 곧게 펴서 브레이크 손잡이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항상 뒤 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나중에 앞 브레이크를 잡는다. 앞 브레이크를 먼저 잡으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
  코너를 돌기 전에 속도를 줄인다. 돌 때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넘어질 수 있다. 발을 반듯이 하고 발끝과 발바닥 사이로 페달을 밟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 **오르막길** : 오르막길에서 무조건 페달만 밟으면 피곤해질 뿐이다. 팔 힘을 잘 사용해서 상반신을 끌어당기듯이 하면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저단변속)
- **내리막길** :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나 브레이킹을 할 때 허리를 뒤로 끌어당겨 뒷바퀴를 제동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성북천

20분 단거리 코스로 물에 발 담그고 쉬어가기 좋은 곳

성북구청~안암동주민센터~대광초등학교~성북천교(청계천 합류부)까지 2.5km, 약 20분 코스다. 성북천은 7개 코스 중 가장 짧은 코스로, 하천을 중간에 두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는 데다 꽃길과 솟대, 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열린다.

원시림 닮은 자전거도로

탄천은 잠실한강공원~탄천 · 양재천 합류부~광평교~가락시장으로 가는 7km로, 약 40분 정도 걸린다. 잠실한강공원에서 출발해 3km 정도 강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 한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합류부가 나타나는데 왼쪽으로 난 자전거도로가 탄천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탄천은 하천폭이 넓은 데다 인적이 닿지 않은 원시림처럼 보존되어 있어 달리다보면 대자연의 웅장함에 제압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탄천

서울숲~도봉산역까지 22km… 장거리 하이킹 워밍업하기 좋은 곳

중랑천은 응봉산과 서울숲 사이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1호선 도봉산역까지 22km(약 104분)에 달하는 중상급 코스다. 중랑천은 한강 지천 중 가장 규모가 큰 하천으로 평균 하폭이 200m에 달하는 만큼 자전거도로도 널찍하다. 출발해 2km 정도 달리면 태조 이성계가 쏜 화살이 꽂혔다는 '살곶이다리'를 만난다.

22 km

중랑천

굽이굽이 시골 개천 달리는 듯

성내천 인공폭포~동아일보사(오금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까지 이어지는 4km로, 27분 코스다.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멋이 있다. 짧지만 굽어 돌아가는 길이 많아 새삼 자전거를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성내천

ONE WAY
ONE WAY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

- **헬멧** : 안전과 함께 주행 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착용한다. 헬멧은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만약 헬멧이 없을 경우에는 방한, 방수, 방진과 머리의 흩날림을 막아주고 바람에 쉽게 날리지 않는 챙이 있는 모자를 선택한다.
- **신발** : 발의 통증과 미끄럼 방지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한다. 바닥이 얇은 신발이나 샌들은 발의 피로를 일으키기 쉽고, 슬리퍼는 페달에 감겨 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 때도 발의 피로와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 **복장** : 신축성이 있고,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의 의상을 선택한다.
- **장갑** : 손의 부상과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특히 팔목이 장시간동안 꺾이는 관계로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손목까지 단단히 조여 주는 것이 좋다.
- **기타** : 운동 중 땀을 닦기 위해 수건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운동으로 인해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자전거 타는 자세

- **허리** : 30° 정도 가볍게 굽혀야 노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무게중심** : 양쪽 손잡이와 배꼽이 그리는 삼각형 안에 무게 중심이 오도록 한다.
- **다리** : 한쪽 페달이 가장 낮은 위치에 왔을 때 다리가 거의 펴진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굽어지는 정도로 안장의 높이를 맞춘다.

- **저자** 필립 짐바르도, 존 보이드
- **역자** 오정아
- **출판사** 프런티어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삶은 곧 의사결정의 연속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시간의 심리학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계획

왜 돈은 현명하게 쓰면서 시간은 그러지 못할까? 시간은 저축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쓰기로 마음먹든 그렇지 않든 흘러가버리는 게 시간이니 말이다. 아니면 시간을 쓴다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면 돈이 관련된 거래에는 유형의 물건을 주고받는 의식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를테면 알람 시계 값으로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야 시계를 받는 식이다. 시간은 돈처럼 주고 뭔가를 받을 수도, 병에 담아 물건과 바꿀 수도 없으니 유형의 자산보다 가치가 덜한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에 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도 시간을 쉽게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관련된 행동이 전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적당히 세우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지만 지나치면 현재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만 하는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병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 하며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거나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늘 걱정한다."(277쪽)

시간을 둘러싼 패러독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시급과 월급을 받는 현대인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시간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으며,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는 등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시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저자들은 시간관을 크게 과거 지향적, 현재 지향적, 미래 지향적 시간관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다시 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 초월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으로 분류했다. 어린아이부터 94세 노인까지 조사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한다.

시간을 둘러싼 첫 번째 패러독스는, 시간관이 의사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지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의 역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패러독스는, 시간관적 범주 가운데 몇 가지에는 장점이 여럿 있지만, 한 가지 범주를 과하게 선호할 경우 그것의 부정적 효과가 장점을 훼손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과거 긍정적, 현재 쾌락적, 미래 지향적 같은 시간관의 장점은 크지만, 특정 시간관에만 기대어 의사를 결정하면 그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은 대체로 해로운 시간관이다. 만일 이 2가지 시간관 중 하나에라도 치우쳐 있다면 앞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을 보는 관점은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며, 시간관도 습득되고 교정돼 더욱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 삶의 수수께끼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시간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보는 관점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며, 시간관도 습득되고 교정돼 더욱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 삶의 수수께끼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시간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갖는 법

1부에서는 6가지 시간관과 유형에 따른 특징을 소개한다. 시간관을 만드는 환경, 과거 지향적·현재 지향적·미래 지향적 시간관에 따른 의사 결정과 태도의 차이를 말한다. 2부에서는 건강과 수익성 높은 투자,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사업 경영, 즐거운 인간관계 등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갖는 법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시간관)가 삶의 방식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갖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망에 만족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아실현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일이나 경력 면에서도 더욱 성공적이었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만족스러웠다."(404쪽)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했던 세계적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존 보이드와 함께 인간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30년간 15개국의 수만 명의 삶을 관찰하며 일생을 보낸 뒤, 시간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흥미롭게 담아냈다.

나아가 삶의 중심을 잡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슬쩍 건넨다. 즉,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전시 〈예술로 판화를 담다〉

- 일시 : 2016. 6. 1.(수) ~ 6. 30.(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작가 : 구자현, 김덕기, 김선두, 박수근, 이왈종, 최석운 등 6인
- 전시품 : 〈제주생활의 중도〉 등 판화 13점
- 주관 : 월간 미술
- 문의 : 02-788-2269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세계유산산책 음악극 〈프로이트를 만난 판소리 속 그들〉

- 일시 : 2016. 6. 4.(토) 19:00 ~ 20:10
- 장소 : 국회잔디마당
- 내용 : 판소리(춘향가·수궁가·심청가)의 주인공들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 전통 음악극

  * 관람문의 : 02-580-327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www.kotpa.org

국회음악산책

원주 YWCA 어린이 합창단의 '꿈꾸는 노랫소리'

- 일시 : 2016. 6. 16.(목) 18:10 ~ 18:4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연 : 원주 YWCA 어린이 합창단 (지휘 : 한윤주, 반주 : 김한솔)
- 곡목 : 꽃구름 속에, 과일의 합창소리, 뭉게구름, 내가 만드는 노래 등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신청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선착순 자유관람
- 추천 : 국회의원 김기선
- 문의 : 02-788-3111~2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국회 영화상영

- 일시 : 2016. 6. 16.(목) 1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영화 : 미정 [6월 초 국회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참조]
- 예약 : 이메일(pr2@na.go.kr)로 선착순 접수 (성명, 연락처, 신청매수 필수기입)
- 문의 : 02-788-3111~2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 6. 16.(목) 국회음악산책에 이어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마감일 및 학술지 발간일

공 모 마감일 상반기 2월 28일, 하반기 8월 31일

학술지 발간일 상반기 5월 31일, 하반기 11월 3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공모 마감일 이후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E-mail 제출 (journal@nabo.go.kr)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편집위원회

전 화 02-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예산춘추를
스마트폰으로도 만나보세요!
www.nabo.go.kr

ISSN 1739-5542

심사숙고

深 思 熟 考

깊이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여
꼼꼼히 살피는 마음으로 나라살림을 지키고
나라정책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